

2015

남북통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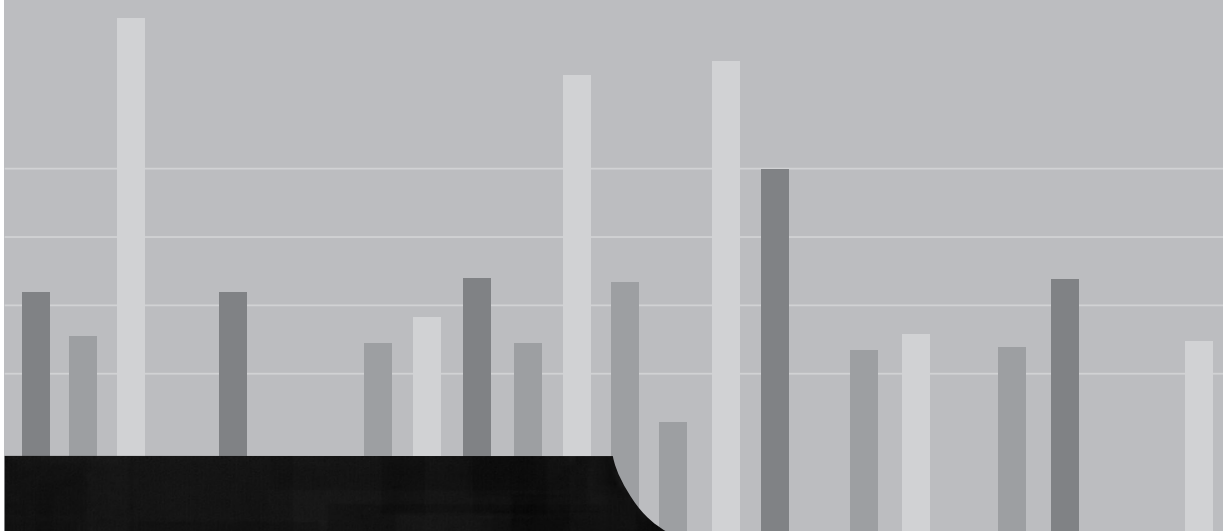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 보고서는 2014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됨
(NRF-2010-361-A00017)



CONTENTS

2015 남북통합지수

1부 /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 07 1. 2015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 10 2. 영역별 요약 및 전망
- 20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5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부 / 2015년 남북통합지수

- 29 1장. 구조통합지수
 - 29 1. 경제
 - 29 가. 지수구성
 - 30 나. 제도통합지수
 - 35 다. 관계통합지수
 - 50 라. 종합
 - 59 2. 정치
 - 59 가. 지수구성
 - 60 나. 제도통합지수
 - 67 다. 관계통합지수
 - 92 라. 종합
 - 95 3. 사회문화
 - 95 가. 지수구성
 - 96 나. 제도통합지수
 - 104 다. 관계통합지수
 - 122 라. 종합
- 127 2장. 의식통합지수
 - 127 1. 지수구성
 - 129 2. 영역별 지수
 - 129 가. 경제
 - 141 나. 정치
 - 151 다. 사회문화
 - 163 3. 종합
- 167 3장. 남북통합지수: 2008~2014

2015 남북통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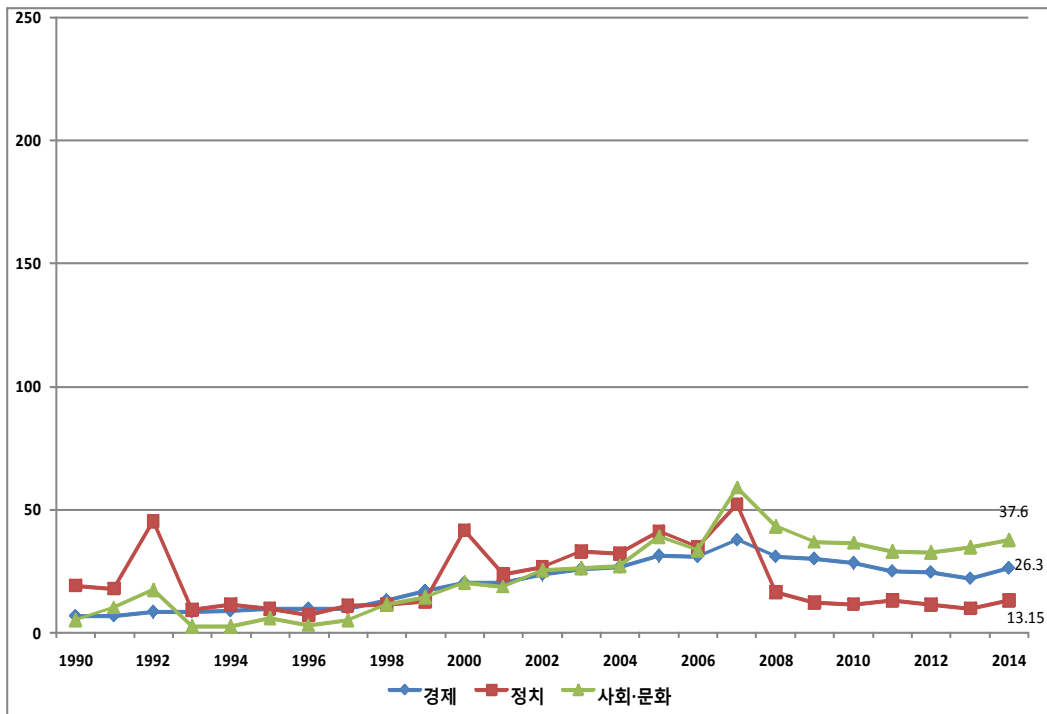
IPUS

1부.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5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2. 영역별 요약 및 전망
3. 남북통합지수의 평가, 전망,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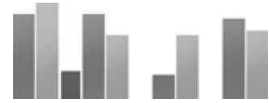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1. 2015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그림 1〉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5년 남북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구조통합지수는 77.1로 지난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전년 대비 10.2점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9년의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7년 동안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 90.6→2009년 79.4→2010년 76.6→2011년 71.4→2012년 68.8→2013년 66.9→2014년 77.1을 나타냈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비록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하지만 관계적 통합수준은 개성공단의 활성화, 남북한 당국간 접촉 증가,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영



역의 교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1점 상승하였다. 연도별 관계통합지수는 2008년 63.3→2009년 49.6→2010년 48.2→2011년 42.9→2012년 41.7→2013년 38.5→2014년 46.6을 나타냈다.

둘째, 영역별 통합단계를 보면, 지난해 0단계까지 떨어졌던 정치영역의 통합단계가 1년만에 다시 1단계를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의 통합 단계는 2009년에 3단계에서 2단계로 하락한 이후 6년 연속 2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의식통합지수는 129.3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7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08년 123.7→2008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3.7→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으로 매년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12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값은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동시에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경제영역의 의식통합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통일대박론’에 의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친 종합지수는 206.4점으로 2011년 190점대로 하락한 이후 4년 만에 200점대를 회복했다. 7년간의 종합지수는 2008년 214.2→2009년 199.9→2010년 201.4→2011년 195.6→2012년 197.6→2013년 190.8→2014년 206.4로 나타났다. 종합지수의 상승은 의식통합 지수의 상승(5.3점)보다 구조통합의 상승(10.2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섯째, 종합지수를 기초로 2014년 현재 남북한의 통합률은 20.6% 수준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 이산가족상봉의 무산, 장성택 부장의 처형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통합률이 다소 하락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상승하여 20%대를 회복했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 모두에서 상승하였다.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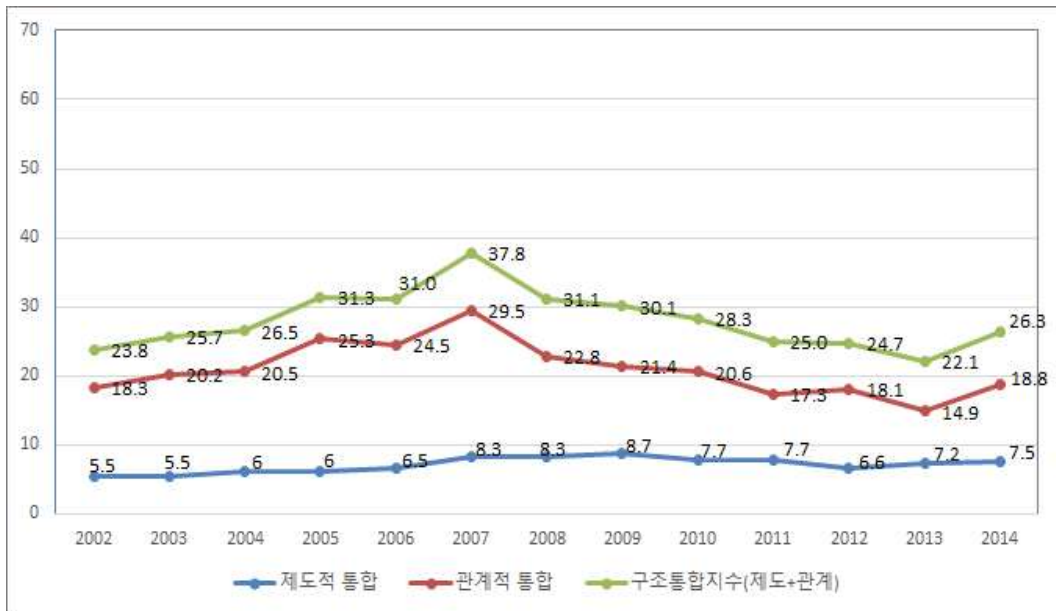
22.1%→2009년 21.6%→2010년 20.9%→2011년 20.2%→2012년 20.4%→2013년 19.1%→2014년 21.1%로 2013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통합률이 떨어졌다가 1년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7.4%→2009년 15.8%→2010년 14.5%→2011년 14.7%→2012년 14.9%→2013년 14.1%→2014년 15.3%로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4%대의 통합률 수준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15%대로 상승했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08년 24.7%→2009년 22.5%→2010년 24.9%→2011년 23.5%→2012년 23.8%→2013년 23.9%→2014년 25.4%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그림 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4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4.2점 상승한 26.3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3년에는 △정부부문 대북투자관련 지출 감소,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부문의 양적변수 감소가 지수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부분,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남북교역 비중 증가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남한기업 고용 북한 노동자 수 증가 및 △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상품 무역의 자유도 증가가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따라서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2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3단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 2014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의 큰 폭의 하락(6.7점)이후 6년 연속 지속되어 온 하락 추세를 딛고 반등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승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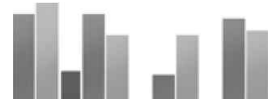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2013년에 약 5개월 간 폐쇄되었던 개성 공단을 통한 교역이 재개됨에 따라 남북교역의 비중이 증하여 교역부문 점수가 2.3점 상승하였고, 남한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수가 실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문 점수가 1.5점 상승하였으며, 상품무역의 자유도는 1.9점 상승하여 이들이 전반적인 경제부문 구조점수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하락요인〉

- 정부부문 대북 투자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부문 점수가 0.7점 하락하였다. 개성공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분야 회담 및 합의서 채택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경제적 위임의 정도가 1.0점 하락한 것도 전반적인 하락의 요인이었다.

- 2015년 경제영역의 구조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경제 분야의 구조 통합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해결되면서 개성 공단을 통한 남북교역과 북한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2013년의 예외적인 상황이 2014년 들어 회복된 것일 뿐이므로 향후 개성공단 사업만으로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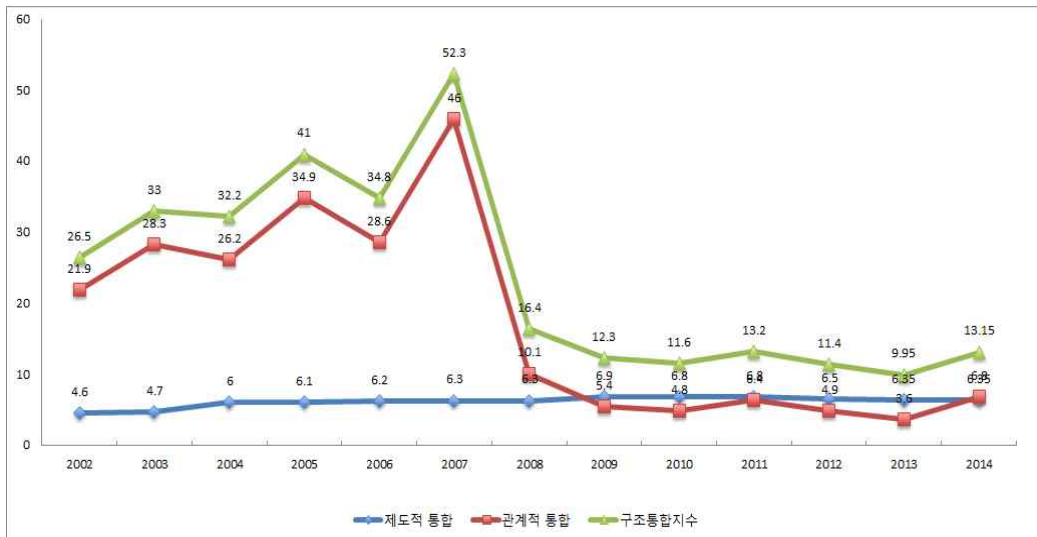
폭의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2015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남북 관계의 변화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남북한 합의에 따라 경제 교류가 재개되고 5.24조치 등이 해제된다면 구조통합지수는 3단계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가 지속될 경우 올해에 비해 소폭의 변화만 보이면서 2단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09년 41.3점 → 2010년 40.6점 → 2011년 41.5점 → 2012년 42.5점 → 2013년 40.8점 → 2014년 43.4점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등락의 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15.1점 → 2014년 17.0점으로 1.9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2013년의 긴장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이 함께 작용하며 남한 주민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2년 26.4점 → 2013년 25.7점 → 2014년 26.4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하였다.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서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면서 상대점수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외부와의 교역 증가 및 비공식 경제 활동 경험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시장 경제에 대해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개혁의 필요성 또한 체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경제영역의 통합지수는 정치영역과 달리 급격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제영역의 지수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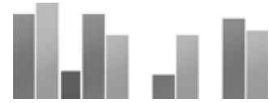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이는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면 경제영역에서의 남북통합도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정치영역에 대한 경제영역의 독자성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영역의 발전이 정치영역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기능주의적 가설이 적용되기에는 현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정도는 충분한 독자성과 추동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치

〈그림 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4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통합지수는 50.5점으로 2013년의 46.6점에 비해 3.9점 상승하였다. 2013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나누어 보면 구조통합은 작년보다 3.2점이 상승한 13.15점을 기록하였고, 의식통합은 0.7점이 상승한 37.3점을 기록하였다.



- 구조통합은 201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이후 2013년 9.95점으로 0단계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3.2점이 상승하여 1단계를 가까스로 회복하였다. 남북 간에 대화·회담 등의 빈도와 교류의 비중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약간 생겨난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2008년에 3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진 이후 줄곧 1단계를 유지하다 2013년에는 0단계로 떨어져 바닥을 친 후 2014년에 다시 1단계로 올라섰다. 2014년에 1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과 10월 북한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남한 방문으로 최악의 경색국면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
- 구조통합의 한 축인 제도통합 부분은 정치 분야나 군사 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가 존재하지 않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치체도의 단일화 정도와 공동법제화 수준(전문가평가)은 2013년과 동일하다. 관계통합은 3.2점이 상승하여 2014년 전반적 구조통합지수를 끌어 올렸는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당국자 실무회담(2.12~14)과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한 북한실세 3인방과의 남북고위급접촉 및 회담(10.04)이 이루어졌고 남북군사당국자 접촉(10.15)이 이어짐으로써 지수상승을 견인하였다. 정치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핵실험과 핵전쟁 위협 등 최고조의 위기 국면을 맞았던 2013년의 상황으로부터는 다소 벗어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지수는 1점이 상승하였다.
- 의식통합은 80점 중에서 37.3점으로 통합수준은 46.6%였으며, 전년인 2013년과 비교하면 0.7점 상승, 2012년(37.8%)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0.7점),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0.2점),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0.5점)가 높아진 반면, 통일의 필요성(0.1점), 정치제도 동질성(0.6점)은 낮아졌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작년보다

1) 2013년의 구조통합지수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긴장되었던 199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1차 핵위기로 남북관계가 급랭하였던 1993~1997년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0.6점 하락한 반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은 1.3점 상승했다.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상대(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정치의식통합지수가 하락한 반면, 북한주민의 정치통합의식은 상대(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의식통합 상승을 견인하였다. 전반적으로 2014년 남북한 주민의 정치통합의식 상승은 북한주민들의 통합의식이 상승한 결과이며, 핵실험과 전쟁위협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의 국면에서 벗어난데 따른 반사효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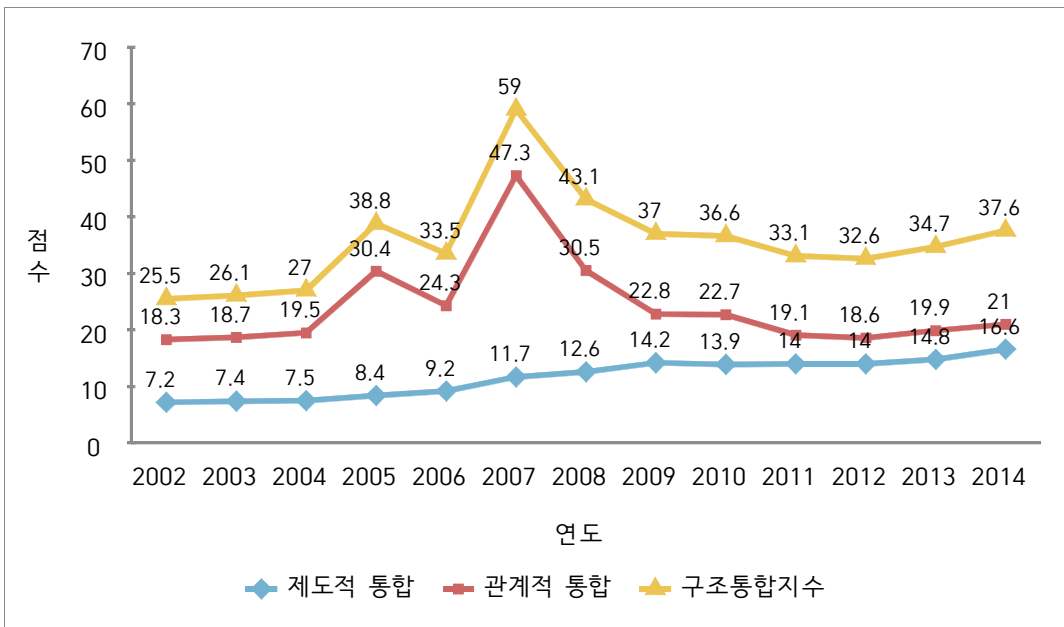
- 2014년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는 이전 해의 0단계에서 벗어나 1단계로 회복되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전 해에 개정된 ‘유일령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강력히 작동하여 방대한 권력숙청이 진행되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등 매우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대남관계에서는 이러한 고립·압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산가족상봉과 고위급 정치실세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등의 행보를 통해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 결과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는 9.95점에서 13.15점으로 상승했고 0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섰다.
- 2015년 상반기의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2015년 남북통합지수가 전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시기여서 연초부터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6.15기념행사가 무산되었고,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6.23), 대북전단 살포,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북한이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8월 초로 예정된 이회호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부 간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8월 15일 전후로 해외동포 및 남한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주도의 공동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남북정부 간에 갈등이 촉발될 우려도 있다. 그



러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관광이 5.24조치와 별도로 재개될 수 있다는 발언(7.27)으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북한은 2014년에 추가로 신설한 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19개의 경제개발구와 기존의 경제특구에 해외투자를 기대하고 있어서 북한의 호응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협전략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한미군사훈련 등 정치군사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2015년 남북통합지수를 높이려면 현 정부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별도의 트랙으로 대북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초 위에 남북경협과 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전략적 연계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사회문화

〈그림 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4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6.2점(구조통합지수 37.6점 + 의식통합지수 48.6점)으로 전년 대비 2.9점이 상승하였다. 이 중에서 구조통합지수는 제도적 통합지수 16.6과 관계적 통합지수 21.0점을 합하여 37.6점이다. 이 수치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14년 구조통합지수의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공동법제화, 인적왕래,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집행,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의 단일화,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에서는 전년 대비 진전이 없었으나, 남북한 사회문화 제도의 단일화, 공동행사,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인적 이동 자유화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

- 2014년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가 이전 해보다 소폭 상승한 데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인천아시안게임 및 유소년 축구단 등 스포츠 분야의 교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4년부터 제도통합에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 지표가 세분화되어 새롭게 측정되어 반영되었고, 탈북자의 입국 수 지표가 추가됨으로써 전년 대비 구조통합지수가 상승하였다.

- 2008년~2014년 기간 동안 구조통합지수의 증감률 변화를 비교해 보면 2008년 -16.1, 2009년 -6.1, 2010년 -1.16, 2011년 -3.54, 2012년 -0.5, 2013년 +2.1, 2014년 +2.9로 소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상승은 사회문화 영역 구조통합지수가 2012년 바닥치기(bottom-out)를 하고 2013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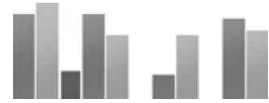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2014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8.6점으로 2013년 46.4점에 비해 2.2포인트가 상승하여 200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2008년 이



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점으로 격년을 주기로 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동 추이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상태가 남북관계의 상황적인 요인에(특히 2014년의 경우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의 참여 등의 영향이 큼)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상승을 이끈 주요 요소는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제외한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이다. 이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이 전년도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 등 상대방의 사회문화 접촉 경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용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일방의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매년 연속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형성에서 ‘거울영상 효과(mirror image effect)’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항목들에서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남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이 점은 정책적으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남한 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통합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015년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의 전망을 예측해보면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로서 남북한 정부 및 시민사회 모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사회문화영역의 다방면에서는 남북한 교류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전년 대비 통합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북 전단지 살포, UN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 북한의 남한주민 억류 및 표류된 북한어민의 미송환 문제 등이 사회문화영역의 통합 수준 상승을 억제하는 상황적 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5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015년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지수가 반등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고루 통합지수가 상승한 것이다. 덕분에 정치영역은 통합수준이 가장 낮은 0 단계를 벗어나 1단계를 회복했다.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도 여전히 낮은 2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지수는 상승했다. 특히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으로써 의식통합지수에서도 지수가 상승하였다. 여전히 낮은 통합수준에 머물러 있고 의미 있는 ‘도약’에 필요한 3단계를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수상승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통합지수가 상승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상황악화 상태로 파악하는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비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대했던 남북한 교류나 만남의 기회들도 대부분 무산되었기 때문에 통합지수의 상승을 곧바로 남북관계 개선과 동일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근거로 하여 얻어지는 통합수준의 지수화가 일상적 감각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부는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 표면의 물살과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물의 흐름은 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수면과 수면 아래의 괴리와 편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다.

남북관계는 신뢰수준이 낮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보다는 실제 행동과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담론 차원의 실감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통합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합을 증진시키는 힘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희망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소중히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통합자산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노력이 절실한지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2015년 남북통합지

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희망찾기에 도움이 될 몇 가지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개성공단은 매우 중요한 통합자산

2015년 통합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 통합이 진전된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인해 남북교역 비중이 증가했고 남한기업의 고용 및 북한노동자 수가 증가했으며 북한의 상품무역 자유도가 증가했다. 2013년도 남북통합지수 발표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가 향후 통합지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이 점에서 공단의 정상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개성공단이 이처럼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통합효과를 제공하는 이유는 남북한이 함께 책임을 저야하는 제도적인 틀과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상화 이후 개성공단에서는 생산규모의 확대, 북한노동자의 고용증가, 남북교역액의 증대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여전히 3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분적인 갈등들이 없지 않지만 남북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보여주는 제도적 효과는 두말할 필요 없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개성공단이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통합자산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지 경제통합의 제도효과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형 통일모델의 중요한 실험장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은 대화를 통해 공동의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임과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보편적인 시장경제 원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동기를 존중하면서도 ‘민족경제’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이 열



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정치적 통합이나 사회문화적 통합과는 별개로 가동될 수 있음을 증명해 줌으로써 통일과정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게 해 준다.

기존의 통합자산을 활용하여 ‘통일대박’으로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큰 정치와 부문별 통합노력을 결합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은 여러 부문들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뢰구축과 통합의 진전을 이루는 점진적 과정이고 그런 점에서 ‘작은 통일’들의 종합이어야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려면 전략적 비전을 지닌 큰 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개성공단 사례가 보여주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작은 통일을 담당하는 주체의 힘은 미약하고 실천의 현장들은 취약하다. 기존의 통합자산을 보호, 확대하려는 정책적 비전이 꾸준하고도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나. 갈등관리와 평화유지의 중요성

2015년 남북통합지수가 상승한 데에는 여러 차례의 대화와 만남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을 계기로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방남하여 남북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남북군사당국자의 접촉도 진행되었다. 이산가족의 상봉행사도 두 차례 개최되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민족재결합의 순간을 확인하였다. 작은 규모이지만 학술, 문화, 종교 분야에서의 방북도 이루어졌다. 아쉽게도 기대되었던 또 다른 만남의 장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인적교류와 대화의 노력이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군사적 대립이나 경제통합의 난관에 비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소통과 공감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부문이 통합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군사적 충돌이나 물리적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이래 대청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지난 수년간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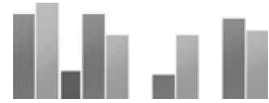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한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도발이나 무력 충돌로 평화가 교란된 사건들이 계속되었다. 2014년에도 상당한 비난전은 계속되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탓에 통합지수를 떨어트릴 요인이 감소했다. 낮은 신뢰 단계에서는 상호간 갈등과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평화의 정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북통합을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크게 두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는 ‘튼튼한 안보’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이다. 한반도 군사대치 상황과 북한의 행동방식을 고려할 때 강력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대북한 적대성에 기초한 군사적 역량만으로 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효과적 긴장관리를 위해서는 남북한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노력들이 다차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적이면서 진정성을 담은 대화와 교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 작지만 유의미한 북한의 변화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부분적이지만 계층화와 정보화의 흐름도 나타난다. 집권 3년차를 보내고 있는 김정은의 리더십은 여전히 정치군사적, 사상적 통제력에 기초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남북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북한체제를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을 더 요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만듦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변화가 남북통합의 방향과 연결되는 제도적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정치적 대화나 타협을 책임질 위임제도나 기구의 출현을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정치분야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전체주의적이며 폐쇄적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시장화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장경제의 제도화는 불분명하여 개성공단의 3통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이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본과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갖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남북 간 투자나 생산, 유통에 필요한 안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에는 요원하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문화교류나 인적왕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경제특구 정책이 시장원리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에는 장마당이 필수적인 제도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돈주의 힘이 커지고 있으며 '장마당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남북한 교역액이 증가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수가 늘어나며 상품무역 자유화 부문이 높아졌다. 또 정보화 기술의 확대로 무선통신이 일반화되고 있고 각종 정보가 유통되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남북한 간 기술적 문화적 표준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화와 기술문화적 변화가 갖는 통합효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라. 낮은 통합단계에서의 통일준비

2015년 통합지수 상승에 영향에는 의식통합지수의 증대도 한 요인이었다. 특히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경제분야에서의 의식통합지수가 두드러지게 상승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효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통일대박론은 통일비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염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반대의견을 극복하고 통일을 새

로운 기회이자 성장의 동력이라는 발전적 가치, 긍정적 미래상과 연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수년간 감소하고 있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시대에 맞는 통일교육과 유연한 통일담론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통일대박론이 담론과 당위의 차원에 머무는 한 의식통합지수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통일대박론이 실질적이고도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구조통합지수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신뢰가 조성되면 다양한 민간부문의 작은 통로들이 출현함으로써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장이 열리도록 정책적 지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 일관성 속에서 비로소 제도통합의 기회가 생겨날 수 있고 남북통합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소극적이고 도발적인 반응이 큰 장애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를 극복하고 넘어설 정부의 큰 정치, 일관된 전략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준비는 좀 더 실질적이고 차분하게, 또 겸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통합단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상호신뢰가 매우 낮은 단계에서 제도적 통합효과는 미미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현가능한 영역에서부터 통일준비를 추진해 가야 한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이나 경제특구 구상을 활용하여 남북통합의 제도적 공간과 기구들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힘을 활용하면서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남북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 되어야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자가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민족의 통일대업 역시 성실한 책임감과 역사적 책임감, 그리고 전략적 비전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2015 남북통합지수

IPUS

2부. 2015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2. 정치
3. 사회문화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2. 영역별 지수
3. 종합

3장. 남북통합지수: 2008~2014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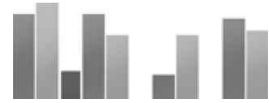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가. 지수구성

〈표 1-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input type="checkbox"/>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30
	<input type="checkbox"/> 동일화폐 사용	30
	<input type="checkbox"/>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30
관계적 통합	<input type="checkbox"/>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 교역부문	20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 투자부문	20
	<input type="checkbox"/>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 노동부문	20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도와 비관세장벽의 존재 : 무역자유화 부문	20
	<input type="checkbox"/>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20
	<input type="checkbox"/> 소득수준의 수렴	20
	<input type="checkbox"/> 이자율의 수렴	10
	<input type="checkbox"/>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10
	<input type="checkbox"/> 경기변동의 동조화	10
<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1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임): 10점 이하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11-20점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높음): 21-30점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 31-50점
- 4단계 (3단계 + 관세나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51-70점
- 5단계 (4단계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을 자유화함, 상당한 정도의 노동 이동도 가능): 71-100점
- 6단계 (5단계 + 회원국의 정책을 구속하는 제도 - 위임적 제도 - 의 수립): 101-130점
- 7단계 (6단계 + 동일 화폐 사용): 131-160점
- 8단계 (7단계 +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 + 모든 경제정책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 + 실질적인 경제적 통일을 이룬 단계): 221-250점

나. 제도통합지수

(1)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부문은 현재까지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기관(delegated institution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통합재정의 존재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15점을 배점하고, 남북한 중앙은행의 존재유무와 그 권한 정도에 따라 15점 배점

한다.

- 현재는 남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 제도·정책 부문의 배점은 0점이다.

(2) 공동화폐의 사용 - 화폐 동맹

-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 부문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이 EU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단계: 북한화폐 태환화 10점
2단계: 북한화폐의 남한 화폐에 대한 페그(peg) 10점
3단계: 남북한 공동화폐의 사용 10점

(3)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 남북한 법제의 공동법제화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법제화 수준' 배점과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 '법제의 실효화' 배점의 합으로 측정된다.
-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과, 그 부문별 점수를 합계한 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2015년 7월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2014년 경제분야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15점 만



점으로 환산하면 6.5점이었으며,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0.1점 하락한 점수이다.

- ‘북한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공동법제의 구속력’은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이 소폭 등락하였다. 이는 최근 남북경협 시도, 북한의 경제 특구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 발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법을 제정한 후, 기타 경제 관련 법령의 입법이 미진하였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 협력도 이렇다 할 제도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경제분야의 공동법제화 점수는 전체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표 1-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북한의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1.9	2.4	2.4	2.7	2.6	3.0	2.9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1.5	2.1	2.1	2.0	1.6	1.8	1.7
경제분야 공동법제 구속력	2.9	2.7	2.2	2.0	1.4	1.8	1.9
합계	6.3	7.2	6.7	6.7	5.6	6.6	6.5

■ 법제 실효화 수준은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한 것에 이어, 2011년 8월 ‘금강산에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 한다고 밝혀,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년과 동일한 1점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법제의 실효화 점수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 및 생산 수단의 소유가

일부 인정되어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한 바 있고, 헌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과 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 이를 ‘투자의 자유’와 관련된 경제적 자유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1점을 부여하였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실효화 점수는 2점대를 유지하였다.

- 하지만, 2009년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 개혁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0.5점을 감점하였고, 2009년 실효화 점수는 1.5점을 부여하였다.
- 또 한 2010년 3월 북한은 ‘북한이 금강산 지구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한 점’을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실효화 점수를 2009년 0.5점 하락한 1점을 부여하였다.

■ 이상의 남북한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평가에 의한 ‘법제화 수준’ 점수 6.5점(2013년에 비해 0.1점 하락)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 1점(2013년에 비해 0.4점 상승)을 합하여 7.5점이 된다.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경제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공동의 화폐의 사용,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하여 7.5점을 부여한다.

- 현재 남북 사이의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공동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법제화 수준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을 합산하여 7.5점이 된다. 따라서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수준 점수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표 1-3>에 나타나 있다.



〈표 1-3〉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제도와 정책(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제,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1989	0	0	1	0	1
1990	0	0	1	0	1
1991	0	0	1	0	1
1992	0	0	2	0	2
1993	0	0	2	0	2
1994	0	0	2	0	2
1995	0	0	2	0	2
1996	0	0	2	0	2
1997	0	0	2	0	2
1998	0	0	3	2	5
1999	0	0	3	2	5
2000	0	0	3	2	5
2001	0	0	3	2	5
2002	0	0	3.5	2	5.5
2003	0	0	3.5	2	5.5
2004	0	0	4	2	6
2005	0	0	4	2	6
2006	0	0	4.5	2	6.5
2007	0	0	6.3	2	8.3
2008	0	0	6.3	2	8.3
2009	0	0	7.2	1.5*	8.7
2010	0	0	6.7	1	7.7
2011	0	0	6.7	1	7.7
2012	0	0	5.6	1	6.6
2013	0	0	6.6	0.6**	7.2
2014	0	0	6.5	1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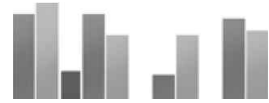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2009년 11월에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대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보다 0.5점이 하락한 1.5점을 부여함.

** 개성공단이 5개월 가량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5/12의 점수를 부여함

다. 관계통합지수

(1) 교역부문

- 2014년 북한의 무역액(남북교역 제외)은 76.1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 광물 자원 수출의 급감으로 수출 총액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및 섬유류를 중심으로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무역 총액은 전년보다 2.7억 달러 증가하였다.
- 2014년 남북교역액은 2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2% 증가하였다.
- 남북교역의 증가는 2013년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의 생산이 재개되면서 물품의 반출입이 활성화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 가공교역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무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개성 공단 중단으로 인해 10%대로 떨어졌던 남북 교역 비중이 다시 1년 만에 20%대로 회복된 것이다.
- 2014년에도 북한의 전체 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국과의 교역이었다. 전반적인 교역 규모의 증가로 그 비율은 2013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7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 2014년 북한 무역현황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국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 무역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2013년에는 북한 무역의 증가율이 7.8%에 달하였으나 2014년의 증가율은 그 절반 정도인 3.6%에 그쳤다.



-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경기 하강으로 인한 중국 수요 감소와 지하자원 가격 하락으로 풀이된다.
- 그러나 2013년 개성공단의 조업 재개로 인한 효과가 2014년에 반영되어 남북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남북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 교역은 17.4% 증가하였다.
- 2014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달러가 증가하여, 약 100억 달러에 근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 개방도가 64%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60%를 돌파하였다.

〈그림 1-1〉 북한 무역 총액과 무역 개방도 추이

(단위: 왼쪽 축은 %, 오른쪽 축은 백만 달러)



- 이상을 종합하면, 교역부문 상대점수는 북한 전체 교역액 대비 남북교역의 상대적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3점 상승한 5.3점을 기록하였다²⁾.

〈표 1-4〉 교역부문 상대점수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북한무역액 ^a (A)	남북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1989	4,516	19	4,534	0.4%	0.1
1990	4,170	14	4,184	0.3%	0.1
1991	2,584	111	2,695	4.1%	0.9
1992	2,555	173	2,728	6.4%	1.4
1993	2,646	187	2,833	6.6%	1.5
1994	2,100	195	2,295	8.5%	1.9
1995	2,052	287	2,339	12.3%	2.8
1996	1,977	252	2,229	11.3%	2.5
1997	2,177	308	2,485	12.4%	2.8
1998	1,442	222	1,664	13.3%	3.0
1999	1,480	333	1,813	18.4%	4.1
2000	1,969	425	2,394	17.8%	4.0
2001	2,270	403	2,673	15.1%	3.4
2002	2,260	642	2,902	22.1%	5.0
2003	2,391	724	3,115	23.2%	5.2
2004	2,857	697	3,554	19.6%	4.4
2005	3,002	1,056	4,058	26.0%	5.8
2006	2,996	1,350	4,346	31.1%	7.0
2007	2,940	1,798	4,738	37.9%	8.5
2008	3,816	1,820	5,636	32.3%	7.2

2) 교역부문의 상대점수는 EUNA COMECON과 같이 경제통합도가 높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남북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6년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가의 국가별 전체 교역액 중 역내교역(intra-EU)의 비중 자료와 1985년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6개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연방)의 역내 수출비중 자료를 사용한다. 각각 68.9% 과 56%로 이 두 수치의 평균인 62.4%를 상대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연도	북한무역액a (A)	남북교역액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2009	3,414	1,679	5,093	33.0%	7.4
2010	4,174	1,912	6,086	31.4%	7.1
2011	6,316	1,714	8,030	21.3%	4.8
2012	6,811	1,971	8,782	22.4%	5.0
2013	7,340	1,136	8,476	13.4%	3.0
2014	7,610	2,343	9,953	23.5%	5.3

- a.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년호’ (남북교역액은 제외)
- b.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교류통계

(2) 투자부문

- 대북투자액은 크게 ‘정부 대북투자’와 ‘민간 대북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대북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대북투자액을 산정하였다.
- 정부 대북투자액은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액(이하 지원액),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이하 용자액)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14년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 성격으로 규정한 지원액과 용자액의 합은 약 4천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였다.
- 2014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2천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위 금액은 대북 경협기반 조성 사업 중 대북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DMZ 평화 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코리아 DMZ협의회’, ‘다자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용자액 및 경험기반 조성 유상지원액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70% 감소한 2천 2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 2014년 투자부문 상대점수는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투자 관련 지출이 감소한 결과, 전년 대비 0.7점 하락한 0.6점을 기록하였다³⁾.
- 2014년은 지원액 지출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용자액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투자부문의 지수 역시 하락하였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의 대북투자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상대 점수 역시 1점을 전후하여 유지되는 추세이다.

3) 투자부문의 경제통합지수는 경제통합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국민소득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고, 남한의 대북투자액을 이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GDP의 FDI 비중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3개년에 걸친 국민소득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평균값은 5.87%이다.



〈표 1-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 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89					17,720	0.00	0.0
1990					16,706	0.00	0.0
1991					15,554	0.00	0.0
1992					13,842	0.00	0.0
1993					11,678	0.00	0.0
1994					9,334	0.00	0.0
1995					5,215	0.00	0.0
1996	4.9		5	9.9	10,528	0.09	0.2
1997			1	1.0	10,309	0.01	0.0
1998			1	1.0	10,260	0.01	0.0
1999			125	125.0	10,265	1.22	2.9
2000	14.6		22	36.6	10,593	0.35	0.8
2001	89.9	46.0	28	163.9	11,007	1.49	3.6
2002	36.8	35.7	12	84.5	10,887	0.78	1.9
2003	76.3	54.7	8	139.0	11,028	1.26	3.0
2004	76	81.4	12	169.4	11,145	1.52	3.6
2005	204.5	56.8	45	306.3	13,001	2.36	5.6
2006	152.1	71.0		223.1	13,741	1.62	3.9
2007	172.5	140.0		312.5	14,728	2.12	5.1
2008	110.0	36.6		146.6	13,327	1.10	2.6
2009	41.5	24.0		65.5	12,043	0.54	1.3
2010	17.7	45.2		62.9	13,959	0.45	1.1
2011	12.4	13.0		25.4	15,719	0.16	0.4
2012	23.8	22.1		45.9	15,962	0.32	0.8
2013	11.5	74.6		86.1	15,474	0.56	1.3
2014	20	22.3		42.3	15,660^d	0.27	0.6

-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 연호’ (1,000원 = 1달러 적용)
-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한국은행
- c. 북한소득은 UN 웹사이트(<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의 명목소득(GNI) 통계사용.
- d. 2013년도 국민소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북한경제성장률 1.2%를 곱하여 산출함.

(3) 노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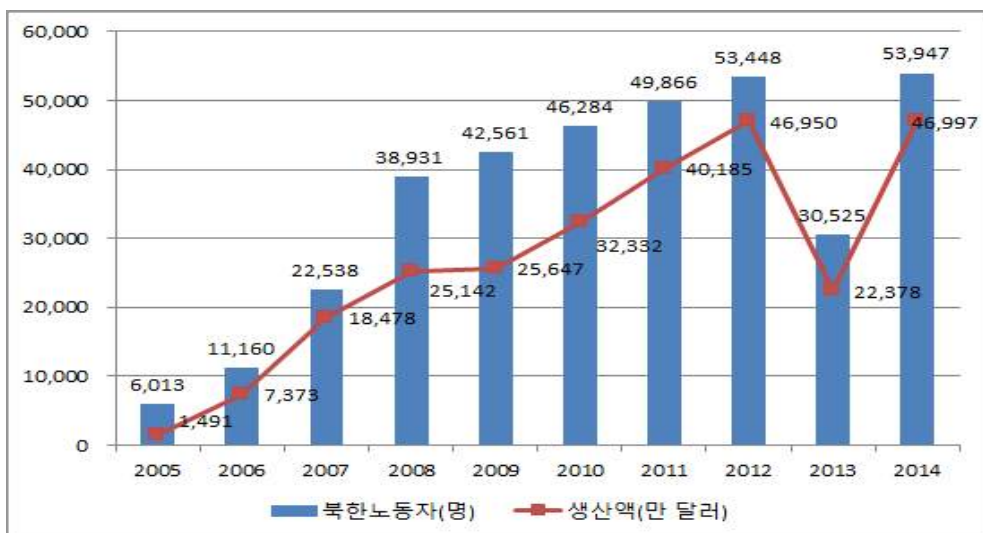
■ 개성공단 고용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약 5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다. 2013년 개성공단이 약 5개월 간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실효 노동 인원은 전년 대비 76.7% 증가한 것이다.

○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 유입규모⁴⁾에 현재 고용된 북한노동력 규모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 2014년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개성공단의 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1.5점 증가한 3.4점을 기록하였다.

—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 역시 2013년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고 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1-2〉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4) 정창무(2007) 인구이동 예측결과는 202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창무, 2007, 통일 이후 노동인구이동 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표 1-6〉 노동부문 상대점수

(단위: 명)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1989	0	0.0
1990	0	0.0
1991	0	0.0
1992	0	0.0
1993	0	0.0
1994	0	0.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0	0.0
1999	0	0.0
2000	0	0.0
2001	0	0.0
2002	0	0.0
2003	0	0.0
2004	0	0.0
2005	7,621	0.5
2006	11,189	0.7
2007	22,538	1.4
2008	38,931	2.4
2009	42,561	2.7
2010	46,284	2.9
2011	49,866	3.1
2012	53,448	3.3
2013	30,525 ^b	1.9
2014	53,947	3.4

a. 통일부 웹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 고용 북한 노동자 수 (2014년 12월말 기준)

b. 연말 현재 노동인구 52,379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5/12)를 곱하여 산출함

(4) 무역자유화 부문

- 2014년에는 2010년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상품무역과 인력 이동에서도 심대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0~2012년과 동일한 6.0점을 부여한다.
- 무역자유화 부문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자유화정도의 합산을 통해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 상품무역은 다시 '관세 유무'와 '교역금지품목 범위'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10. 6. 14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 모든 물품의 반출입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2010년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극소수의 예외만 제외하고는 반출입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2009년까지는 남북 간 무관세로 인해 상품 무역자유화 점수를 5점 부여하여 왔으나, 상기 교역금지 조치로 실질적 의미에서 상품 무역자유화 정도에 심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부터 0.5점이 낮은 4.5점을 부여하였다.
-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 점수는 '북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 등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한다.
 - 2009년 서비스와 인력 이동부문에 문제가 되었던, '유씨 억류문제', '12.1조치'⁵⁾ 등은 2010년도에 해소되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경협사업에

5)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인원의 (육로)통행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남북 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함.



대해서는 남한 사업자들이 방북승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 따라서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2010년과 비교하여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문에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1.5점을 부여한다.

〈표 1-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89	5	0	5.0	
1990	5	0	5.0	
1991	5	0	5.0	
1992	5	0	5.0	
1993	5	0	5.0	
1994	5	0	5.0	
1995	5	0	5.0	
1996	5	0	5.0	
1997	5	0	5.0	
1998	5	0	5.0	
1999	5	0	5.0	
2000	5	0	5.0	
2001	5	0	5.0	
2002	5	0	5.0	
2003	5	0	5.0	
2004	5	1	6.0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채택(1)
2005	5	2	7.0	KT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시(1)
2006	5	2	7.0	
2007	5	2	7.0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2008	5	2	7.0	
2009	5	1.5	6.5	'12.1 조치' : 인적이동 제한 '유씨 억류사건' : 거주인력 안정보장 문제 발생
2010	4.5	1.5	6.0	'5.24 조치' : 상품무역 및 인력이동에 대한 제약요인 발생
2011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2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3	2.6	1.5	4.1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개성공단 폐쇄(5개월)에 따른 점수 차감
2014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5)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 2014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매개제도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경제회담이 몇 차례 개최되었으나 합의문이 채택된 바는 없어서, 전년보다 1점이 하락한 3.5점의 상대점수를 채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s)를 2007년 2차 정상회담이후 설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규정하고, 매개제도의 존재와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차등하여 점수 부여한다.
- 제도 확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제도인 공동위원회가 2014년에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3점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0점에 그친다.



○ 제도 확립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2014년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협의를 위한 경제회담이 3차례 개최된 것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표 1-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단위: 회)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⁶⁾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상대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1989							0.0	0.0	0.0
1990							0.0	0.0	0.0
1991							0.0	0.0	0.0
1992							0.0	0.0	0.0
1993							0.0	0.0	0.0
1994							0.0	0.0	0.0
1995							0.0	0.0	0.0
1996							0.0	0.0	0.0
1997							0.0	0.0	0.0
1998							0.0	0.0	0.0
1999							0.0	0.0	0.0
2000	0	3	2	3	0	0	3.0	0.5	5.5
2001a	0	3	0	3	2	3	6.0	0.5	3.5
2002	0	3	2	14	11	16.5	30.5	1.5	6.5
2003	0	3	2	17	14	21	38.0	2.0	7.0
2004	0	3	2	13	8	12	25.0	1.5	6.5
2005	0	3	2	11	6	9	23.0	1.5	6.5
2006	0	3	2	8	3	4.5	12.5	1.0	6.0
2007	0	3	2	22	16	24	46.0	2.5	7.5
2008	0	3	0	3	1	1.5	4.5	0.5	3.5
2009	0	3	0	4	0	0	4.0	0.5	3.5
2010	0	3	0	3	0	0	3.0	0.5	3.5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⁶⁾					상대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2011	0	3	0	0	0	0	0	0	3
2012	0	3	0	0	0	0	0	0	3
2013	0	3	0	22	5	7.5	29.5	1.5	4.5
2014	0	3	0	3	0	0	3.0	0.5	3.5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a. 2001년, 2008, 2009년에는 경제회담은 개최된 바 있으나, 경추위, 공동위원회 등의 매개기관은 작동하지 않았음.

(6) 소득수준 수렴

■ 2014년에 남한은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북한은 1.0% 성장에 그쳐 남북한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 북한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0% 이하 수준이어서 소득수렴 부문의 상대점수는 예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 2014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 1인당 소득수준은 2% 정도이다.

6) 제도 확립관련 양적변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 합의서 가중치 : 합의서 채택은 회담 개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담 개최에 비해 0.5의 가중을 더 주었다.

* 연도별 점수는 다음 수식으로 산출: 연도가중치 = 경제회담 개최 수 + 경제관련 합의서 채택 수 * 1.5

* 상대점수는 연도 연도별 점수에 따라 0~5점까지 범위에서 상대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도별 점수가 80이상을 넘을 만큼 활발히 회담이 개최되고, 합의서가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점수는 5점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매개제도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만으로는 10점 이상의 점수는 부여될 수 없고, 위임제도가 존재하였을 때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표 1-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달러,%)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1989	911	5,824	16%	1.74
1990	835	6,608	13%	1.08
1991	753	7,636	10%	0.42
1992	659	8,112	8%	0
1993	547	8,858	6%	0
1994	432	10,288	4%	0
1995	239	12,448	2%	0
1996	476	13,330	4%	0
1997	461	12,283	4%	0
1998	455	8,119	6%	0
1999	451	10,476	4%	0
2000	461	12,128	4%	0
2001	475	11,461	4%	0
2002	467	13,074	4%	0
2003	470	14,549	3%	0
2004	472	16,310	3%	0
2005	547	18,947	3%	0
2006	574	21,315	3%	0
2007	596	23,528	3%	0
2008	550	20,936	3%	0
2009	495	18,682	3%	0
2010	570	22,611	3%	0
2011	639	24,820	3%	0
2012	645	25,210	3%	0
2013	622	26,718	2%	0
2014^a	626	27,679	2%	0

※ 자료: UN 웹사이트(<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1인당 명목 GNI 기준,
 a. 2014년 소득은 2013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수치는 UN 공식통계반영 점수 재조정됨.

(7) 이자율의 수렴

- 이자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대출이자율과 화폐시장이자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이자율의 수렴정도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통합지수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현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8)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C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점수도 0점을 부여한다.

(9) 경기변동의 동조화

- 경기변동의 동조화는 월별 산업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 자료를 활용하되 추이(trend)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기변동을 동조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영역에서의 현재 점수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 북한에 주식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설이후 '북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과 남



한저축액과의 상관계수' 및 '남북한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통합정도를 측정한다.

- 현재 이 부문의 상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

- 2014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4.2점 상승한 26.3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4년에는 △정부부문 대북투자관련 지출 감소,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부문의 양적변수 감소가 지수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부분,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남북교역 비중 증가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남한기업 고용 북한 노동자 수 증가 및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상품 무역의 자유도 증가가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따라서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2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3단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표 1-10〉 2012년/2013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부문	2013년	2014년	증감	요인
변화 부문	경제분야 공동 법제화	7.2	7.5	0.3	개성공단 재개로 인한 법제 실효화 부문의 예년 수준 회복
	교역	3.0	5.3	2.3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교역액의 증가
	투자	1.3	0.6	-0.7	남북경협기금 투자관련 지출액의 감소
	노동	1.9	3.4	1.5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실효 노동자수 증가
	무역자유화	4.1	6.0	1.9	개성공단 재개로 인한 상품무역 자유화 부문의 예년 수준 회복
	경제적 위임	4.5	3.5	-1.0	경제관련 회담 개최 감소 및 합의서 채택 감소
불변 부문	공동제도와 정책	0	0	-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할 위임기관 부재
	공동화폐의 사용	0	0	-	남북공동 화폐 사용 관련 진전 없음.
	소득 수렴	0	0	-	남북 간 소득격차 확대
	이자율 수렴	0	0	-	북한의 시장 이자율 미확립
	인플레이션 수렴	0	0	-	북한의 가격 자유화 미도입
	경기변동 동조화	0	0	-	남북한 경기변동 동조 요인이 없음 어려움.
	자본시장 통합도	0	0	-	북한 자본시장 미도입
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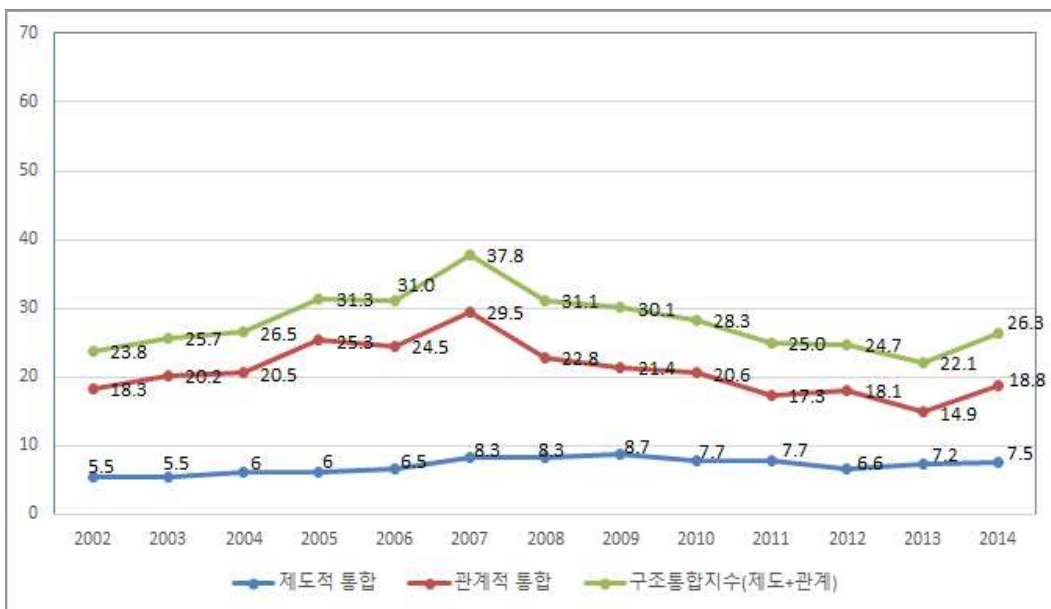


〈표 1-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중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	0	1	0.1	0.0	0.0	5.0	0.0	1.52	0	0	0	0	7.6	0단계
1990	0	0	1	0.1	0.0	0.0	5.0	0.0	0.86	0	0	0	0	6.9	0단계
1991	0	0	1	0.9	0.0	0.0	5.0	0.0	0	0	0	0	0	6.9	0단계
1992	0	0	2	1.4	0.0	0.0	5.0	0.0	0	0	0	0	0	8.4	0단계
1993	0	0	2	1.5	0.0	0.0	5.0	0.0	0	0	0	0	0	8.5	0단계
1994	0	0	2	1.9	0.0	0.0	5.0	0.0	0	0	0	0	0	8.9	0단계
1995	0	0	2	2.8	0.0	0.0	5.0	0.0	0	0	0	0	0	9.8	0단계
1996	0	0	2	2.5	0.2	0.0	5.0	0.0	0	0	0	0	0	9.8	0단계
1997	0	0	2	2.8	0.0	0.0	5.0	0.0	0	0	0	0	0	9.8	0단계
1998	0	0	5	3.0	0.0	0.0	5.0	0.0	0	0	0	0	0	13.0	1단계
1999	0	0	5	4.1	2.9	0.0	5.0	0.0	0	0	0	0	0	17.0	1단계
2000	0	0	5	4.0	0.8	0.0	5.0	5.5	0	0	0	0	0	20.3	1단계
2001	0	0	5	3.4	3.6	0.0	5.0	3.5	0	0	0	0	0	20.4	1단계
2002	0	0	5.5	5.0	1.9	0.0	5.0	6.5	0	0	0	0	0	23.8	2단계
2003	0	0	5.5	5.2	3.0	0.0	5.0	7.0	0	0	0	0	0	25.7	2단계
2004	0	0	6	4.4	3.6	0.0	6.0	6.5	0	0	0	0	0	26.5	2단계
2005	0	0	6	5.8	5.6	0.4	7.0	6.5	0	0	0	0	0	31.3	3단계
2006	0	0	6.5	7.0	3.9	0.7	7.0	6.0	0	0	0	0	0	31.0	3단계
2007	0	0	8.3	8.5	5.1	1.4	7.0	7.5	0	0	0	0	0	37.8	3단계
2008	0	0	8.3	7.2	2.6	2.4	7.0	3.5	0	0	0	0	0	31.1	3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2009	0	0	8.7	7.4	1.3	2.7	6.5	3.5	0	0	0	0	0	30.1	2단계
2010	0	0	7.7	7.1	1.2	2.9	6.0	3.5	0	0	0	0	0	28.4	2단계
2011	0	0	7.7	4.8	0.5	3.1	6.0	3.0	0	0	0	0	0	25.1	2단계
2012	0	0	6.6	5.0	0.9	3.3	6.0	3.0	0	0	0	0	0	24.7	2단계
2013	0.0	0.0	7.2	3.0	1.3	1.9	4.1	4.5	0.0	0.0	0.0	0.0	0.0	22.1	2단계
2014	0.0	0.0	7.5	5.3	0.6	3.4	6.0	3.5	0.0	0.0	0.0	0.0	0.0	26.3	2단계

〈그림 1-3〉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참조 1] 북한소득 자료를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통합지수 산정

- 북한의 국민소득 자료를 김병연·김석진·이근(2007)과 김병연(2008)⁷⁾이 추정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민소득(GDP) 통계를 사용할 경우 경제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구매력평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투자부문’과 ‘소득수렴 부문’에서 UN명목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우선 2014년 투자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0.5점이 하락한 0.4점을 부여한다.

〈표 1-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기 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89					45,160	0.00	0.0
1990					41,979	0.00	0.0
1991					40,437	0.00	0.0
1992					36,293	0.00	0.0
1993					34,198	0.00	0.0
1994					34,272	0.00	0.0
1995					31,065	0.00	0.0

7) Byung-Yeon, Kim, Suk Jin Kim, Keun Lee, 2007,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5 (2007) 564-582, 김병연, 2008,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기 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옹자)					
1996	4.9		5.0	9.9	30,206	0.03	0.1
1997			1.0	1.0	26,826	0.00	0.0
1998			1.0	1.0	27,801	0.00	0.0
1999			125.0	125.0	30,407	0.41	1.4
2000	14.6		22.0	36.6	28,539	0.13	0.4
2001	89.9	46.0	28.0	163.9	30,442	0.54	1.8
2002	36.8	35.7	12.0	84.5	30,757	0.27	0.9
2003	76.3	54.7	8.0	139.0	31,643	0.44	1.5
2004	76.0	81.4	12.0	169.4	32,020	0.53	1.8
2005	204.5	56.8	45.0	306.3	33,567	0.91	3.1
2006	152.1	71.0		223.1	33,718	0.66	2.3
2007	172.5	140.0		312.5	32,294	0.97	3.3
2008	110.0	36.6		146.6	33,295	0.44	1.5
2009	41.5	24.0		65.5	32,995	0.20	0.7
2010	17.7	45.2		62.9	32,830	0.19	0.7
2011	12.4	13.0	0.0	25.4	33,093	0.08	0.3
2012	23.8	22.1		45.9	33,523	0.14	0.5
2013	11.5	74.6		86.1	33,859	0.25	0.9
2014	20	22.3		42.3	34,265	0.12	0.4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 = 1달러 적용)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한국은행

c. Byung-Yeon, Kim, Suk Jin Kim, Keun Lee, 2007

d. 2008년 이후의 북한국민소득은 전년도 통계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소득수준 수렴부문에서는 구매력평가 자료에서도 북한소득이 남한소득의 대비 10% 미만으로 상대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1-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단위: 달러, %)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1990	2,076	8,590	24%	3.5
1991	1,973	9,650	20%	2.62
1992	1,745	10,330	17%	1.96
1993	1,619	11,130	15%	1.3
1994	1,605	12,230	13%	1.08
1995	1,442	13,450	11%	0.42
1996	1,393	14,540	10%	0
1997	1,230	15,470	8%	0
1998	1,267	14,520	9%	0
1999	1,377	16,250	8%	0
2000	1,287	17,960	7%	0
2001	1,368	19,070	7%	0
2002	1,375	20,700	7%	0
2003	1,405	21,310	7%	0
2004	1,410	22,920	6%	0
2005	1,464	24,030	6%	0
2006	1,461	25,770	6%	0
2007	1,392	27,790	5%	0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2008	1,430 ^c	28,720	5%	0
2009	1,410	28,330	5%	0
2010	1,395	30,500	5%	0
2011	1,399	31,510	4%	0
2012	1,411	32,350	4%	0
2013	1,420	33,330	4%	0
2014	1,430	34,620	4%	0

- a. 김병연, 김석진, 이근 (2007), 김병연(2008)
- b. World bank 'WDI Online Data Availability Query'. World bank 웹사이트, 1인당 GNI (PPP)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 c. 2008년 이후 북한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구매력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4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4.5점 상승한 26.1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1-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화 폐사용 (30)	법제의 시장경 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지출 수렴 (10)	인플레 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	0	1	0.1	0.0	0.0	5.0	0.0	1.74	0	0	0	0	7.8	0단계
1990	0	0	1	0.1	0.0	0.0	5.0	0.0	1.08	0	0	0	0	7.2	0단계
1991	0	0	1	0.9	0.0	0.0	5.0	0.0	0.42	0	0	0	0	7.3	0단계
1992	0	0	2	1.4	0.0	0.0	5.0	0.0	0	0	0	0	0	8.4	0단계
1993	0	0	2	1.5	0.0	0.0	5.0	0.0	0	0	0	0	0	8.5	0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화 폐사용 (30)	법제의 시장경 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94	0	0	2	1.9	0.0	0.0	5.0	0.0	0	0	0	0	0	8.9	0단계
1995	0	0	2	2.8	0.0	0.0	5.0	0.0	0	0	0	0	0	9.8	0단계
1996	0	0	2	2.5	0.2	0.0	5.0	0.0	0	0	0	0	0	9.8	0단계
1997	0	0	2	2.8	0.0	0.0	5.0	0.0	0	0	0	0	0	9.8	0단계
1998	0	0	5	3.0	0.0	0.0	5.0	0.0	0	0	0	0	0	13.0	1단계
1999	0	0	5	4.1	1.4	0.0	5.0	0.0	0	0	0	0	0	15.5	1단계
2000	0	0	5	4.0	0.4	0.0	5.0	5.5	0	0	0	0	0	19.9	1단계
2001	0	0	5	3.4	1.8	0.0	5.0	3.5	0	0	0	0	0	18.7	1단계
2002	0	0	5.5	5.0	0.9	0.0	5.0	6.5	0	0	0	0	0	22.9	2단계
2003	0	0	5.5	5.2	1.5	0.0	5.0	7.0	0	0	0	0	0	24.2	2단계
2004	0	0	6	4.4	1.8	0.0	6.0	6.5	0	0	0	0	0	24.7	2단계
2005	0	0	6	5.8	3.1	0.5	7.0	6.5	0	0	0	0	0	28.9	2단계
2006	0	0	6.5	7.0	2.3	0.7	7.0	6.0	0	0	0	0	0	29.4	2단계
2007	0	0	8.3	8.5	3.3	1.4	7.0	7.5	0	0	0	0	0	36.0	3단계
2008	0	0	8.3	7.2	1.5	2.4	7.0	3.5	0	0	0	0	0	30.0	2단계
2009	0	0	8.7	7.4	0.6	2.7	6.5	3.5	0	0	0	0	0	29.4	2단계
2010	0	0	7.7	7.1	0.6	2.9	6.0	3.5	0	0	0	0	0	27.8	2단계
2011	0	0	7.7	4.8	0.3	3.1	6.0	3.0	0	0	0	0	0	24.9	2단계
2012	0	0	6.6	5.0	0.5	3.3	6.0	3.0	0	0	0	0	0	24.5	2단계
2013	0.0	0.0	7.2	3.0	0.9	1.9	4.1	4.5	0.0	0.0	0.0	0.0	0.0	21.6	2단계
2014	0	0	7.5	5.3	0.4	3.4	6.0	3.5	0.0	0	0	0	0	26.1	2단계

2. 정치

가. 지수구성

■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1-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 구조 통합	제도적 통합	<input type="checkbox"/> 정치·군사의 공동집행기구	30
		<input type="checkbox"/> 정치제도의 단일화	30
		<input type="checkbox"/>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30
		소계	90
	관계적 통합	<input type="checkbox"/> 실무정치회담	20
		<input type="checkbox"/> 고위급 정치회담	20
		<input type="checkbox"/> 군사회담	20
		<input type="checkbox"/> 의회회담	20
		<input type="checkbox"/> 대화·회담의 정례화	10
		<input type="checkbox"/>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20
		<input type="checkbox"/> 정치분야 공동행사	10
		<input type="checkbox"/>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10
		<input type="checkbox"/> 군비축소	10
		<input type="checkbox"/>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input type="checkbox"/> 상대체제인정 행위	1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정치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정치적 대화·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11-20점
- 2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빈도·비중이 높음): 21-40
- 3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 41-60
- 4단계 (3단계+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61-80
- 5단계 (4단계+매개제도의 정례화·제도화 진행): 81-100
- 6단계 (5단계+매개제도의 역할 최대화): 101-130
- 7단계 (6단계+남북공동집행기구 구성과 활동): 131-160
- 8단계 (7단계+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61-190
- 9단계 (8단계+모든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91-220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정치통합): 221-250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 간 정치분야에서 민주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정치통합은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으로 구분하며, 구조통합은 다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의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 먼저 제도적 측면의 정치통합, 즉 제도통합은 남북의 정치행위를 규제·규정하는 공동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기구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남북한의 정치제도가 상호 동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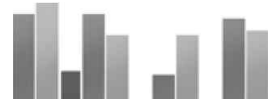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도통합의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 정치제도의 동질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정도를 측정변인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남북한간 공동집행기구(정치·군사)의 구성과 활성화, 남북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 분야의 남북 공동법제화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 1-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공동집행기구	남북정치공동기구	15
		남북군사공동기구	15
	남북정치제도의 단일화	북한 유일지도체계의 변화	10
		북한의 복수후보 선거	10
북한 정당결성의 자유		10	
남북한 공동법제화	북한 정치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15	

(1) 남북공동정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

-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각 15점씩 배정하고, 점수부여 방식은 기구구성 논의 5점, 기구구성 추진 5점, 기구의 활성화 5점으로 배정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진전 정도와 수준에 따라 1~5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 2014년 정치영역이나 군사영역에서 남북한 간에 공동집행기구의 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3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2)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변인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변화하는가(10점),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10점), 자유로운 정당결성의 자유가 존재하는가(10점) 등을 기준으로 30점을 배정하고,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 즉 당이나 정치권에서 논의 및 토론 시작(2.5점), 부분적인 변화 발생(2.5점), 광범위한 변화 발생(2.5점), 법제화 (2.5점)의 진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2014년의 북한의 정치제도는 2013년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는 없다. 2013년 12월 장성택 행정부장의 사형판결과 즉결집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령과 당의 유일영도체계는 더욱 강화되어 엄격하게 집행되었고 이는 2014년도에도 지속되었다. 2014년 3월 9일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김정은 제1비서가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의장·부 의장 선거와 의안 결정 및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들과 내각 총리와 내각 성원 등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14년 국가예산’에 대해 논의되었다. 2014년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의 제 13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4년은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100% 찬성으로 추대되는 등 김정은 체제 다지기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정치제도의 변화는 작년과 동일한 0.5점이다.

(3) 남북한 공동법제화

- 남북한 정치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15점)과 법제의 실효성(15 점)으로 구분된다. 정치분야 공동 법제화 수준은 다시 북한의 법제화 수준(5

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5점),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5점) 등 세 항목으로 구성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2015년 5월~8월 9명의 북한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정치분야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4.85점이다.

〈표 1-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정치분야 북한의 법제화 수준	4.9	2.45	4.85/15
정치분야 남북간 법제의 수렴도	2.4	1.2	
정치분야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2.4	1.2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민주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문헌조사와 탈북자(새터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점 만점 중 피선거권이냐 정치적 자유에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반면, 구속과 체포의 법적 보장 측면에서는 형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특별히 나아진 것으로 없으므로 2014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1.0점을 부여한다.

〈표 1-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구분	헌법조항(98년)	실효성 점수
피선거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	0/5



정치적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	0/5
구속·체포의 법적 보장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79조)	1/5
합계		1/15

※ 실효성 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보통 이상이다'=3점, '상당히 크다'=4점, '전면적 효력이 있다'=5점으로 구분

■ 이상으로 남북한의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19>와 같다.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 및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점수에 북한법제의 실효성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 2014년의 경우,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남북의 법제화 점수 4.85점과 북한법제의 실효성 1점을 합하여 최종 점수는 5.85점이 된다. (1989~2007년 기간의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참고, 2008년 이후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표 1-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1989	1.0	0	1
1990	1.0	0	1
1991	1.0	0	1
1992	2.0	0	2
1993	2.5	0	2.5
1994	2.6	0	2.6
1995	3.1	0	3.1
1996	3.2	0	3.2
1997	3.3	0	3.3
1998	3.8	0	3.8

1999	4.3	0	4.3
2000	4.4	0	4.4
2001	4.5	0	4.5
2002	4.6	0	4.6
2003	4.7	0	4.7
2004	5.0	1	6
2005	5.1	1	6.1
2006	5.2	1	6.2
2007	5.3	1	6.3
2008	5.3	1	6.3
2009	5.4	1	6.4
2010	4.8	1	5.8
2011	4.8	1	5.8
2012	4.5	1	5.5
2013	4.85	1	5.85
2014	4.85	1	5.85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남북공동집행기구 및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된다. 2014년에는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2014년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작년과 동일한 0.5점을 부여한다.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법제화 측면과 실효성 측면을 합한 5.85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를 나타낸 제도통합지수는 아래 <표 1-20>과 같다.



〈표 1-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89	0	0	1	1
1990	0	0	1	1
1991	0	0	1	1
1992	0	0	2	2
1993	0	0	2.5	2.5
1994	0	0	2.6	2.6
1995	0	0	3.1	3.1
1996	0	0	3.2	3.2
1997	0	0	3.3	3.3
1998	0	0	3.8	3.8
1999	0	0	4.3	4.3
2000	0	0	4.4	4.4
2001	0	0	4.5	4.5
2002	0	0	4.6	4.6
2003	0	0	4.7	4.7
2004	0	0	6	6
2005	0	0	6.1	6.1
2006	0	0	6.2	6.2
2007	0	0	6.3	6.3
2008	0	0	6.3	6.3
2009	0	0.5	6.4	6.9
2010	0	1.0	5.8	6.8
2011	0	1.0	5.8	6.8
2012	0	1.0	5.5	6.5
2013	0	0.5	5.85	6.35
2014	0	0.5	5.85	6.35

다. 관계통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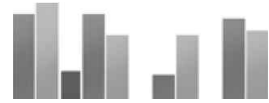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은 남북 간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회담, 의회회담, 정치분야 공동행사, 위원회 존재 및 합의문·공동선언 발표 등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대화·회담의 정례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통합 정도, 상대체제 인정행위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 각종 정치회담이 관계통합의 변인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대화와 협상, 합의 등의 활동이 남북 간 정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대화와 회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과 그러한 대화와 회담이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1) 실무정치회담

- 2014년도 실무정치회담은 1회 열렸다. 2014년 2월 12~14일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추진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2점이 된다.

〈표 1-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1989	5	1.0
1990	11	2.2
1991	10	2.0
1992	77	15.4



1993	4	0.8
1994	10	2.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2	0.4
1999	3	0.6
2000	13	2.6
2001	0	0.0
2002	2	0.4
2003	1	0.2
2004	0	0.0
2005	6	1.2
2006	3	0.6
2007	9	1.8
2008	0.2	0.0
2009	4	0.8
2010	0	0.0
2011	0	0.0
2012	0	0.0
2013	1	0.2
2014	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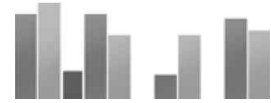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남북회담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2) 고위급 정치회담

- 2014년도에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1회 개최되었다. 2014년 10월 4일 인천아시아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였고,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양건 당 비서 등이 참석하였다. 2014년 고위급 정치회담 점수는 장관급회담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1.5점이다.

〈표 1-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5점	×2점	×1.5점	×0.8점		
1989					0	0
1990		3			3	6
1991		2			2	4
1992		3			3	6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2	2	1.6
2000	1		4		5	11
2001			2		2	3.0
2002			2		2	3.0
2003			4		4	6
2004			2		2	3.0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2005			3	1	4	5.3
2006			2		2	3.0
2007	1	1	2		4	10
2008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1	0	1	1.5

(3) 군사회담

■ 2014년도에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10월 15일에 추진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4점이다.

〈표 1-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2점	×1점	×0.4점		
1989				0	0
1990				0	0
1991				0	0
1992				0	0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0	0
2000	1		3	4	3,2
2001			2	2	0,8
2002			9	9	3,6
2003			6	6	2,4
2004		2	3	5	3,2
2005			3	3	1,2
2006		2	2	4	2,8
2007	1	3	7	11	7,8
2008	0	0	2	2	0,8
2009	0	0	0	0	0
2010	0	0	2	2	0,8
2011	0	0	1	1	0,4
2012	0	0	0	0	0
2013	0	0	0	0	0
2014	0	0	1	1	0,4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2008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1	0.2
2010	0	0	0	1	0	0	0.2
2011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표 1-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가중치
1. 집권여당 간 교류	×1점
2. 제1야당 간 교류	×0.4점
3. 군소정당 간 교류	×0.2점

(5) 정치분야 공동행사

■ 2014년 정치분야 공동행사가 개최된 바 없으므로 0점이다.

〈표 1-26〉 정치분야 공동행사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1	-	(민간)	(민간)-평양		0
2002	-	(민간)	(민간)-서울		0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3	(민간)-서울	미개최	(민간)-평양		0
2004	-	(민간)-인천	조문파동 무산		0
2005	-	남측 당국대표단 (40명)-평양	북측 당국대표단 (17명)-서울		5
2006	-	북측 당국대표단 (19명), 남측 당국대표단 (13명)-광주	수해로 미개최		2.5
2007	-	남측 국회의원 10명- 평양	을지훈련 등 이유 북한불참-미개최		2.5
2008	-	-	-	-	0
2009	-	-	-	-	0
2010	-	남측 공동행사 불허 각기 공동행사	-	-	0
2011	-	-	-	-	0
2012	-	-	-	-	0
2013	-	-	-	-	0
2014	-	-	-	-	0

※ 자료: 김치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7, 2008; 2009년-2014년 공동행사 참여여부는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참조.

(6)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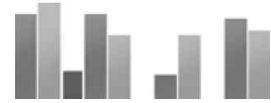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원회, 회담체 등 매개제도의 존재(10점), 매개제도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횟수(10점)로 평가한다. 우

선, 남북 정치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매개제도는 정치, 군사, 외교(핵통제)의 세 영역에 대한 위원회나 회담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외교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매개기구가 존재할 수 있고, 혹은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회담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매개제도의 영역을 정치회담, 군사회담, 외교회담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회담기구(위원회 또는 회담체)의 존재 유무로 점수를 부여한다. 매개기구의 배점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에서 각각 3점씩 부여하여 총 9점을 주고, 나머지 1점을 매개기구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2014년도는 매개제도 영역의 평가는 정치, 군사, 외교 모두에서 구성 및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0점이다. 2014년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남북고위급접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3점이다.

〈표 1-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가중치	×3점	×0.5점	×0.3점	
1989	0	0	0	0
1990	0	1	0	0.5
1991	0	1	2	1.1
1992	3	10	1	14.3
1993	0	0	0	0
1994	0	2	0	1
1995	0	1	0	0.5
1996	0	0	0	0
1997	0	0	0	0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1998	0	0	0	0
1999	0	1	0	0.5
2000	2	7	5	11
2001	2	0	1	6.3
2002	2	0	4	7.2
2003	2	0	4	7.2
2004	2	1	2	7.1
2005	2	2	4	8.2
2006	2	1	1	6.8
2007	2	5	3	9.4
2008	1	0	0	3
2009	0	0	1	0.3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1	0.3

(7) 대화 · 회담의 정례화

- 2014년 정치분야 회담이 2회 개최되었으나 다음 회담 일정 역시 잡혀 있지 않으므로, 정례화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0점이다.

〈표 1-28〉 대화 · 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점수	정례화 수준	설명
0점	전혀 되어있지 않음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는 방식
2.5점	약간 정례화	정기적 회담 개최가 문서로 약속되어 있거나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 되어 있음
5점	중간정도(보통) 정례화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회담개최가 정기적 간격으로 개최됨
7.5점	상당한 수준으로 정례화	매 회담에서 다음 회담 일정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기적 회담 개최 방식으로 회담 개최가 추진됨
10점	완벽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례화된 회담 개최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됨

※ 2010년부터 이 변인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였음.

〈표 1-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정례화 수준 (10)		정례화 수준 (10)
1989	0	2002	2.5
1990	2.5	2003	5
1991	2.5	2004	2.5
1992	2.5	2005	2.5
1993	0	2006	2.5
1994	0	2007	2.5
1995	0	2008	0
1996	0	2009	0
1997	0	2010	0
1998	0	2011	0
1999	0	2012	0
2000	2.5	2013	0
2001	2.5	2014	0



(8)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네바군축회의(CD) 등의 국제적 외교·군사회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경우,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지원 등을 포함한다.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은 1회당 1점을 부과하고 비군사외교 분야에서 남북의 국제협력은 0.5점으로 처리하며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1-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가중치	×0.5점	×0.5점	×0.5점	×0.5점	×0.2점	
1989						0
1990						0
1991					2	0.4
1992					2	0.4
1993					3	0.6
1994					1	0.2
1995						0
1996				1	1	0.7
1997	7				1	3.7
1998	4				1	2.2
1999	5					2.5
2000			1		1	0.7
2001			1			0.5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2002			1			0.5
2003		1	1			1.0
2004		4	1			2.5
2005		3	1		2	2.4
2006		1	1			1.0
2007		4	1		2	2.9
2008		2	1		0	1.5
2009			0			0
2010			0			0
2011			2		1	1.2
2012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 자료: 『1999년 국방백서』, 245~246쪽; 『2003참여정부국장정책』, 165~170쪽;

※ 자료: 『2004 국방백서』, 46~47쪽.

(9) 군축

〈표 1-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89	65만명	98만명	163만명	27.0	1.8
1990	65.5만명	99만명	164.5만명	25.5	1.7
1991	65.5만명	99.5만명	165만명	25.0	1.7
1992	65.5만명	101만명	166.5만명	23.5	1.6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93	65.5만명	103만명	168.5만명	21.5	1.4
1994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5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6	69만명	105.5만명	174.5만명	15.5	1.0
1997	69만명	114.7만명	183.7만명	6.3	0.4
1998	69만명	116만명	185만명	5.0	0.3
1999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0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1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2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3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4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5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6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7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8	65.5만여명	119만여명	184.5만여명	5.5	0.4
2009	65만여명*	122만여명	187만여명	3.0	0.2
2010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1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2	63.9만여명	119만여명	182.9만여명	7.1	0.5
2013	63.3만명	119만여명	182.3만여명	7.7	0.5
2014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 자료: 2012년 국방백서; 2011년 국방백서 미발간,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2010년 국방백서 부록 참고; 현재 국방백서 미발간(10월 발간 예정)→국방부 기본정책과 (02-748-6231)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1996년 남한의 병력 3만 5천 증가는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인한 것임.⁸⁾; 『국방백서』, 1988~2000년 각 연도, 2004, 2006년도; 2001~ 2003년은 국방백서 발간 중단으로 국방정책 소개책자; 2008년

8) 국방부, 『1996~1997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6), 64쪽.

자료 출처: 2008국방백서 부록 참고 (2008년 12월 기준)

※ 2013년 자료 출처:

1. 남한 병력-『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13쪽, 2014년 발행.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간행물-정책자료집’에서 열람.
국방부 몇몇 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2012 국방백서> 외에 공표된 자료는 따로 없다는 이야기만 거듭 들었음. 그러나 국방부 홈페이지 안에서 2013년 말 병력이 ‘63.3만 명’으로 표기된 e-book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찾아서 위 표에 반영하였음.
2. 북한 병력-『북한이해 2013』 108쪽,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이 자료는 사실 <2012 국방백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

※ 2014년 자료 출처: 2014년 국방백서, 239쪽, 2014년 12월 발간.

- 군축변인은 남북한 병력 수 190만 명 이상을 0점으로 하고 40만 명을 10점으로 하여 병력감축 수에 따라 비례로 점수를 부여한다. 2014년 남북한 통합 병력 수는 183만여 명으로 2013년 전년에 비해 7천여 명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2014년 병력감축 수준은 0.5점으로 계산된다. 남한군의 감축, 북한군의 증가가 있었으나 변동 폭이 적기 때문에 전년과 대비하면 점수 변화가 없다.

(10)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상호 군사적 대결 혹은 긴장고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신설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부문 점수는 다음 <표 1-33>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군사적 긴장 및 상호 대치가 없는 상태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긴장의 고조에 따라 점수를 낮추고 상호통합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를 최저점인 0점으로 계산하고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된 상호통합도가 완벽한 상태를 최고점인 10점으로 기록한다. 이 항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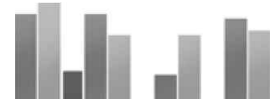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완화 혹은 긴장고조로 상호통합의 정도가 순행 또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문의 점수가 추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을 위해 정례화 점수를 10점으로 축소하고 새롭게 10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치분야의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총점이 변화되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상대체제 인정행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해오던 기존의 평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신설된 항목을 통해 2008년부터 상대체제에 대한 불인정을 바탕으로 군사적 충돌의 수준이 증가한 현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3월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유례없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점수는 기본점수 5점에서 4점(국지적 교전이 일어나 사상자가 50명 이상 발생)이 감소한 1점으로 계산한다.

〈표 1-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점수	내용
10점	군사적 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임
9.5점	군사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9점	군사적 대치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5점	군사적 대치 상태가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이 시도되는 상태임
7.5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7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점수	내용
6.5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시도되는 상태임
6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임
5.5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4.5점	라디오, 신문, 확산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긴장 상태임
4점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임
3.5점	선박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가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3점	전방에서의 전투부대 재배치 등 군사 이동 및 동원이 일어나고 상호 경계선에 대한 침범과 핵공격 위협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임
2.5점	상대방 영토에 대한 총격 및 포격이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2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0~10명에 이르는 경우임.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1.5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10~50명에 이르는 경우임
1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0.5점	생화학무기의 제한적인 사용, 전쟁 선언, 영토의 일부 점령 등이 일어나며 기간 내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 및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임
0점	군사적 긴장과 대치에서 전면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한 상태임



〈표 1-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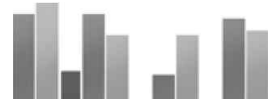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1989	4
1990	4
1991	4
1992	2
1993	3
1994	3
1995	3.5
1996	1
1997	2.5
1998	3.5
1999	1.5
2000	4
2001	4
2002	2
2003	4
2004	4.5
2005	5
2006	4
2007	4.5
2008	2
2009	1.5
2010	1
2011	2.5
2012	2.5
2013	1
2014	2

* 자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연도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참고.

- 2014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는 2점이다.
- 2.0점은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 를 포함하는 상태이다. 2014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빈번했으며, 10월 7일에는 北 경비선의 연평도 인근 NLL 침범으로 5년 만에 남북 합정간 교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4년 주요 군사적 사건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201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 1-34〉 2014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월 9일	北(조평통 서기국 명의 통지문), 우리 측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1월 15일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관계 파국위기’ 등을 거론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
1월 16일	北 국방위, ‘중대제안’ 형식으로 3가지 사항 요구 ①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위한 실천적 조치 ②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질적 조치 ③핵 재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
1월 24일	北 국방위,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중대제안’ 에 대한 우리 측의 호응을 촉구 중대제안’ 은 결코 위장 평화공세도, 선전심리전도 아니며 “서해 5개 섬 열점수역 포함 최전선의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 중지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먼저 취하겠다” 고 주장 통일부 대변인, 北 국방위 공개서한 관련 정부입장 발표 ‘중대제안’ 이 위장 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함을 강조
1월 27일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 통지문 발송 우리측의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행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
2월 21일	北,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2월 24일 ~ 25일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쪽 24km 근해에서 NLL 세 차례 침범
2월 27일	北 탄도 미사일 4발 발사
3월 30일	北 외무성 성명,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3월 31일	北, 서해 해상 사격훈련 실시 北 500여발 사격(이 중 100여발 NLL 이남 우리 측 지역 낙탄), 우리 군 300여발 대응 사격 실시
4월 14일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을 '제2의 천안호 사건 날조' 라고 주장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관련, 무인기는 '누가 봐도 북한 소행' 이라며 대남 비방중단 촉구
4월 15일	北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의 '북 소행설' 은 완전히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외
4월 28일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증폭핵분열실험이나 새로운 대륙간탄도탄실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위협
4월 29일	北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 14:00경부터 10여 분간 50여발 사격(우리 해상구역 낙탄은 없었음.)
4월 30일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3.30(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 고 언급
5월 20일	우리 측 해군,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경비정 2척, 단속정 1척)에 경고사격 실시
5월 21일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 우리 측 함정에 대해 직접적인 조준 타격대상이라며 우리 측이 서해5도에서 도발하는 경우 경고 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
5월 22일	北,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NLL 이남)에서 초계임무 중이던 우리 측 함정 150m 근방에 2발 포격, 우리 측 함정도 NLL 이북에서 경비 중이던 北 함정 인근에 5발 대응 사격
5월 27일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 국방부의 '발사원점' 미확인을 거론하며 긴급안보장관 회의(5.23) 개최 등을 '이중 기만극' 이라고 비난
6월 6일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관련 '남북관계의 더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큰 파국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전쟁 위험이 조성될 것' 이라고 위협
6월 24일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6·25전쟁 64주년 기념식 등에 대해 '북침 전쟁 책동을 합리화, 북침 핵전쟁에 광분' 등으로 비난
6월 26일	北,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3기 발사 北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 연평도 주변 우리 군 훈련에 대해 '남은 것은 최고사령부의 타격명령뿐' 위협
6월 29일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6월 30일	北 국방위 '특별제안' 발표, 우리측에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화해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의
7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국방위 '특별제안' (6.30) 관련 정부입장 발표 - 北 제안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7월 2일	北,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2기 발사
7월 7일	北 공화국 정부 성명,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6.15·10.4 선언 등 남북 합의 존중이행 등을 주장하며,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을 발표
7월 9일	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7월 13일	北,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7월 14일	北, 고성 MDL 인근에서 방사포 및 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
7월 21일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미사일 발사를 합법적 자주권 행사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주장
7월 26일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7월 30일	北,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8월 13일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우리 측이 북측 어선에 무차별적 사격을 가했다고 왜곡 주장하며 보복 위협
8월 17일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UFG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선제타격 위협
8월 18일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관련 '더 높은 단계의 자위적 대응' 을 위협 정부, 국회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14년도 시행계획」 보고(외통위) ※ 주요 내용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인도적 문제 실질 해결 △민족 동질성 회복 위한 사회문화교류 △당국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 등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8월 19일	대통령, 국무회의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함을 강조하면서 8.15 대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 촉구
8월 25일	北 리동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긴급 기자회견, 유엔안보리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긴급 의제로 상정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며 국제사회에 UFG 훈련 문제를 제기
9월 1일	北,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상으로 발사
9월 6일	北,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
9월 19일	北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0월 7일	北 경비선의 연평도 인근 NLL 침범으로 5년 만에 남북 함정 간 교전 발생
10월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개최, 별도 합의 없이 종료(판문점) - 북측은 △서해 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 진입 금지, △민간 차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 포함 비방·중상 중지 요구, 우리 측은 △북측 NLL 준수, △민간단체 활동 및 언론 통제 불가 입장 전달
10월 20일	北(통지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 남측 수석대표), 북측 군사분계선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우리 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조치 위협 南(통지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 북측 단장), 우리 측 조치는 북측 군사분계선 침범(10.18, 19), 도발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북측 책임 전가에 대한 유감 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입장 표명
11월 10일	북한군 판문점 부근 군사분계선에 접근,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
11월 12일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호국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비난
11월 20일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 이라고 위협
11월 21일	北 서남전선 사령부 보도, 우리군의 호국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전을 거론하며 '검푸른 바다에 영영 수장' 시켜 버리겠다고 위협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연평도 포격전 4주년 보수단체 규탄 행사 관련 '최고 존엄 모독을 주장하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

※ 자료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11) 상호체제인정

- 상호체제인정은 기존에 남한과 북한에서 교류와 접촉의 대상을 규제하는 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2011년에 체제 간 상호비방의 강도를 기준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방의 수준과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체제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법 개정 관련부문 점수는 남북교류 관련법과 국가보안법(남한), 형법(북한) 등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두 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총 4개의 법률에 각 2.5점씩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1-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점수	내용
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음
0.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짐
1.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당 수준으로 법제도가 확립됨.
2.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제정(개정)되어 있음

- 먼저 기존의 남북한 법 개정 관련부문 상호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상대체제 인정행위 중 법 개정 관련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환산했으며, 법률적 측면에서 2014년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1.9점으로 평가한다.



〈표 1-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10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989	0.5	0	0	0	0.5
1990	1.0	0	0	0	1.0
1991	1.0	0.1	0	0	1.1
1992	1.0	0.1	0	0	1.1
1993	1.0	0.1	0	0	1.1
1994	1.0	0.1	0	0	1.1
1995	1.0	0.1	0	0.1	1.2
1996	1.0	0.1	0	0.1	1.2
1997	1.0	0.1	0	0.1	1.2
1998	1.0	0.1	0	0.1	1.2
1999	1.0	0.1	0	0.2	1.3
2000	1.0	0.1	0	0.2	1.3
2001	1.0	0.1	0	0.2	1.3
2002	1.5	0.1	0	0.2	1.8
2003	1.5	0.1	0	0.2	1.8
2004	1.5	0.1	0	0.3	1.9
2005	2.0	0.1	0	0.3	2.4
2006	2.0	0.1	0	0.3	2.4
2007	2.0	0.1	0	0.3	2.4
2008	2.0	0.1	0	0.3	2.4
2009	2.0	0.1	0	0.3	2.4
2010	2.0	0.1	0	0.3	2.4
2011	1.5	0.1	0	0.3	1.9
2012	1.5	0.1	0	0.3	1.9
2013	1.5	0.1	0	0.3	1.9
2014	1.5	0.1	0	0.3	1.9

(12) 관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변인의 점수를 합계로 산정된다. 2014년에는 남북당국회담(02.12-14),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고위급정치회담(10.04),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10.15)이 개최되었으며, 정치군사적 긴장도 완화되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점수는 전년과 동일하다. 실무정치회담 부분의 점수는 작년과 동일하나 고위급정치회담과 군사분야의 회담이 각각 1회 개최되면서 관계통합지수가 1.9점 상승하였다. 또한, 군사적 긴장 수위가 1.0점에서 2.0점으로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2014년 정치영역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3.2점이 상승한 6.8점을 기록했다.

〈표 1-37〉 2013년/2014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2013년	2014년	증감	요인
실무정치회담	0,2	0,2	0	남북당국회담 (02.12-14)
고위급정치회담	0	1,5	+1,5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10.04)
군사분야회담	0	0,4	+0,4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10.15)
의회회담	0	0	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정치분야공동행사	0	0	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0	0,3	+0,3	남북 교류 단절 지속
대화· 회담 정례화	0	0	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외교군사적 협력	0	0	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군축	0,5	0,5	0	군사력유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1	2	+1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고조 국면 완화
상호체제인정	1,9	1,9	0	법제도 수준 동일, 상호비방 수준 심각
계	3,6	6,8	+3,2	



라. 종합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는 정치영역 구조통합을 평가한 전체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1-38>과 같다.

<표 1-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	0	1.0	1.0	0	0	0.8	0	0	0	0	1.8	4	0.5	9.1	0
1990	0	0	1.0	2.2	6	0	0.4	0	0.5	2.5	0	1.7	4	1.0	19.3	1
1991	0	0	1.0	2.0	4	0	0.2	0	1.1	2.5	0.4	1.7	4	1.1	18	1
1992	0	0	2.0	15.4	6	0	0	0	14.3	2.5	0.4	1.6	2	1.1	45.3	3
1993	0	0	2.5	0.8	0	0	0	0	0	0	0.6	1.4	3	1.1	9.4	0
1994	0	0	2.6	2.0	0	0	0	0	1	0	0.2	1.4	3	1.1	11.3	1
1995	0	0	3.1	0.0	0	0	0	0	0.5	0	0	1.4	3.5	1.2	9.7	0
1996	0	0	3.2	0.0	0	0	0	0	0	0	0.7	1.0	1	1.2	7.1	0
1997	0	0	3.3	0.0	0	0	0	0	0	0	3.7	0.4	2.5	1.2	11.1	1
1998	0	0	3.8	0.4	0	0	0	0	0	0	2.2	0.3	3.5	1.2	11.4	1
1999	0	0	4.3	0.6	1.6	0	0.2	0	0.5	0	2.5	0.3	1.5	1.3	12.8	1
2000	0	0	4.4	2.6	11	3.2	0.6	0	11	2.5	0.7	0.3	4	1.3	41.6	3
2001	0	0	4.5	0.0	3	0.8	0.4	0	6.3	2.5	0.5	0.3	4	1.3	23.6	2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2002	0	0	4.6	0.4	3	3.6	0.6	0	7.2	2.5	0.5	0.3	2	1.8	26.5	2
2003	0	0	4.7	0.2	6	2.4	0.4	0	7.2	5	1.0	0.3	4	1.8	33	2
2004	0	0	6	0.0	3	3.2	1.2	0	7.1	2.5	2.5	0.3	4.5	1.9	32.2	2
2005	0	0	6.1	1.2	5.3	1.2	1.4	5	8.2	2.5	2.4	0.3	5	2.4	41	3
2006	0	0	6.2	0.6	3	2.8	2.6	2.5	6.8	2.5	1.0	0.4	4	2.4	34.8	2
2007	0	0	6.3	1.8	10	7.8	1.8	2.5	9.4	2.5	2.9	0.4	4.5	2.4	52.3	3
2008	0	0	6.3	0	0	0.8	0	0	3	0	1.5	0.4	2	2.4	16.4	1
2009	0	0.5	6.4	0.8	0	0	0.2	0	0.3	0	0	0.2	1.5	2.4	12.3	1
2010	0	1.0	5.8	0	0	0.8	0.2	0	0	0	0	0.4	1	2.4	11.6	1
2011	0	1.0	5.8	0	0	0.4	0	0	0	0	1.2	0.4	2.5	1.9	13.2	1
2012	0	1.0	5.5	0	0	0	0	0	0	0	0	0.5	2.5	1.9	11.4	1
2013	0	0.5	5.85	0.2	0	0	0	0	0	0	0	0.5	1.0	1.9	9.95	0
2014	0	0.5	5.85	0.2	1.5	0.4	0	0	0.3	0	0	0.5	2	1.9	13.15	1

■ 2014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구조통합지수는 13.15점으로 전년에 비해 3.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준은 1단계로 작년보다 1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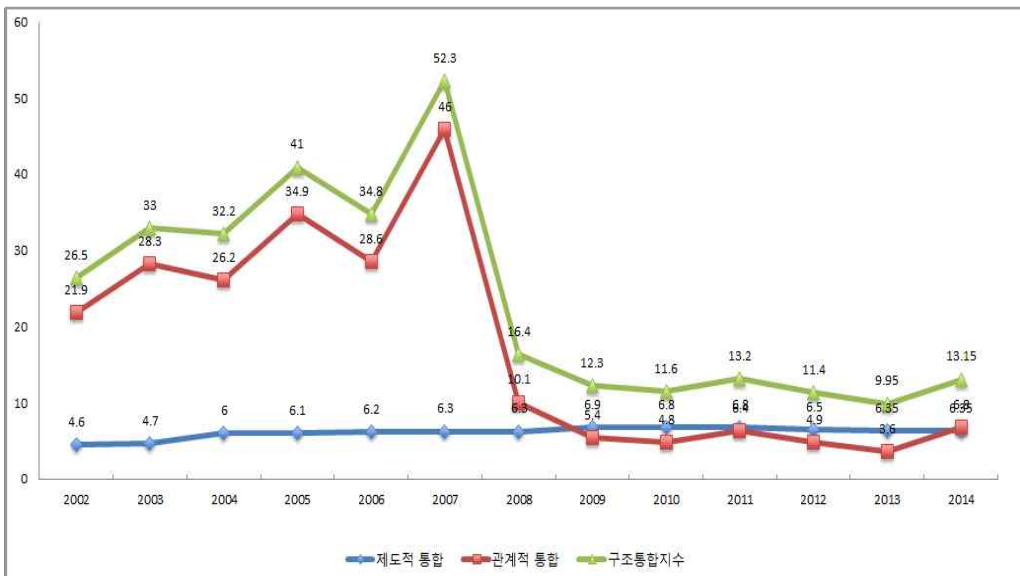
■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도통합 부문에서 전년과 동일했고,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 부분은 3.2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3.2점이 상승하였다.



■ 제도통합 부문은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치체도의 단일화 정도는 0.5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공동법제화 수준도 전년과 동일한 5.85점이다.

■ 관계통합 부문은 각종 회담 부분에서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회담이 각 1회 개최되면서 작년보다 1.9점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회담 및 행사 등과 같은 관계통합 5개의 부문은 0점을 기록하였다. 군축 부분은 남한군의 감축이 있었으나 변동 폭이 적으므로 점수 변화는 없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부분은 작년의 1.0점에서 2.0점으로 지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북 경비선의 연평도 인근 NLL 침범으로 남북 합정 간 교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었다. 상호체제인정 부문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동일한 법제화 수준인 1.9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4〉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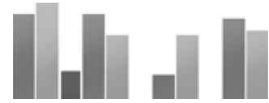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은 반드시 누적적 단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통합은 관계적 통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때 관계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1-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통합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0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0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0
	소계	90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0단계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 11-20점
- 2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 21-40점
- 3단계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 구성): 41-70점
- 4단계 (공동협의기구(매개제도)의 상시화): 71-90점
- 5단계 (주요 대회 공동개최, 자유화 진행): 91점-110점
- 6단계 (남북 사회문화 공동집행기구 구성): 111-130점
- 7단계 (일부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31-160점
- 8단계 (광범위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61-190점
- 9단계 (포괄적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완성):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이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유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제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단, 사회문화 영역의 남북 공동 집행기구는 구성뿐만 아니라 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단일화의 영역은 대표

적 측정지표로서 소통의 도구인 언어와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로 한정한다.

■ 제도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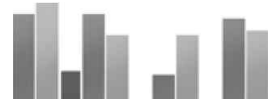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통합 영역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30점)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논의	10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추진	10
		공동의 집행기구 활성화	10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30점)	언어의 표준화	1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	10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30점)	남북한 법제화 수준	15	
	북한 법제의 실효성	15	

(1)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 2014년 현재로서는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점수는 30점 만점 중 0점이다.

(2)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 2014년 현재 남북한 당국 간 사회문화제도(언어, 방송통신기술, 사회복지제도 등)를 표준화 또는 단일화 하려는 조치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0점이다.



-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방송통신기술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지표를 세분화하여 반영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배점은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 2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 중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의 경우 남한주민의 이동전화 이용률⁹⁾과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¹⁰⁾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5%는 0.5점, 26~50%는 1.0점, 51~75%는 1.5점 76~100%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남한주민 이동전화 이용률은 2013년 기준 99.7%이며,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52.5%에 이른다. 따라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 이용률 76.1%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인 2.0점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2.0점이다.
- 한편 민간 차원에서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언어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거래말큰사전 편찬 공정률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56.7%를 기록하여 절반을 넘어섰다.¹¹⁾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 공동회의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에 재개되어 올해 5월 5일~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거래말큰사전 편찬회의와 집필회의를 하였다.¹²⁾ 하지만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 작업은 2010년 12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에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5.7점이다.

9) 통계청 성별 모바일인터넷 단말기 이용 현황 자료

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 북한주민 의식조사” 자료

11) 연합뉴스, “남북경색으로 ‘거래말큰사전’사업 차질”, 2011년 5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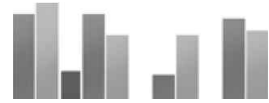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12) 연합뉴스, “거래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5~11일 중 선양서 개최”, 2015년 5월 5일.

(3)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법제화 변수

- 남북한 사회문화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과 법제의 실효성으로 구분된다.
- 먼저, 사회문화영역의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 간 법제의 수렴 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전문가조사는 2015년 5월에 9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를 10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에 5.2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에 3.8점, 그리고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3.7점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합한 결과, 2014년 사회문화영역의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6.35점이다.

〈표 1-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5.2	2.6	6.4/1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8	1.9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7	1.9	



〈표 1-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세부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4.6	4.7	4.4	5.1	5.1	6.0	5.2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4	3.6	3.2	3.4	3.3	3.8	3.8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5.1	5.0	3.8	3.1	3.1	3.4	3.7
평균	4.37	4.43	3.80	3.87	3.83	4.4	4.23

■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의 경우 2014년 점수가 2013년 비해 0.8점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8년 제정되어 2012년 4월까지 총 세 차례 수정, 보충된 「사회보장법」에서 국가 대신 가족의 부양책임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¹³⁾ 그리고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은 작년에 비해 0.3점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4년 3월 ‘드레스덴 통일 구상’ 선언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과 같은 3대 제안을 하면서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및 대내외 통일공감대 확산의 노력 등이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문화 자유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문헌조사, 북한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탈북자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3) 이철수,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참조

■ 2014년 기간 동안 사회문화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법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바는 없으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탈북자 의식조사 결과¹⁴⁾를 보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 또는 “가끔 가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74.6%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여행의 자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나머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관련 법 조항과 신앙의 자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0점을 부여한다.

〈표 1-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헌법조항	실효성 수준*	실효성 점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모든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짐	부분적 실효성 있음	2.5/5
합계 (15점 만점)	2.5	

※ 실효성 점수는 전면적 효력=5점, 부분적 효력=2.5점, 무효력=0점으로 구분

■ 이상의 남북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보면, 2014년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점수는 남북 법제화 정도 6.4점과 북한의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2.5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8.9점으로 2013년보다 0.2점 하락하였다.

14) 이 조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 준거 시점을 조사 시기보다 1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실시된 조사의 경우 설문지 준거 시점은 2014년이다.



〈표 1-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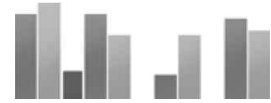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연도 / 구분	법제의 실효성	남북한 법제화 정도	남북한 법제화 점수 (합계)
1989	0	1.1	1.1
1990	0	1.1	1.1
1991	0	1.1	1.1
1992	0	1.3	1.3
1993	0	1.5	1.5
1994	0	1.6	1.6
1995	0	1.9	1.9
1996	0	2.2	2.2
1997	0	3.2	3.2
1998	2.5	4.4	6.9
1999	2.5	4.5	7.0
2000	2.5	4.6	7.1
2001	2.5	4.7	7.2
2002	2.5	4.7	7.2
2003	2.5	4.9	7.4
2004	2.5	5.0	7.5
2005	2.5	5.0	7.5
2006	2.5	5.0	7.5
2007	2.5	6.6	9.1
2008	2.5	6.6	9.1
2009	2.5	6.7	9.2
2010	2.5	5.7	8.2
2011	2.5	5.8	8.3
2012	2.5	5.8	8.3
2013	2.5	6.6	9.1
2014	2.5	6.4	8.9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세 가지의 지표인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각각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2014년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16.6점으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8점 증가하였다.
- 5.24조치 및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문화영역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어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시킬 기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의 이동전화 이용 등으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이 조성된 상태이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 선언 이후의 지속적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인한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강화 등에 힘입어 이전 해보다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이전 해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표 1-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구분 연도	공동집행기구(30)	제도 단일화(30)	남북한 법제화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1989	0	0	1.1	1.1
1990	0	0	1.1	1.1
1991	0	0	1.1	1.1
1992	0	0	1.3	1.3
1993	0	0	1.5	1.5
1994	0	0	1.6	1.6
1995	0	0	1.9	1.9
1996	0	0	2.2	2.2
1997	0	0	3.2	3.2
1998	0	0	6.9	6.9



연도	구분	공동집행기구(30)	제도 단일화(30)	남북한 법제화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1999		0	0	7.0	7.0
2000		0	0	7.1	7.1
2001		0	0	7.2	7.2
2002		0	0	7.2	7.2
2003		0	0	7.4	7.4
2004		0	0	7.5	7.5
2005		0	0.9	7.5	8.4
2006		0	1.7	7.5	9.2
2007		0	2.6	9.1	11.7
2008		0	3.5	9.1	12.6
2009		0	5.0	9.2	14.2
2010		0	5.7	8.2	13.9
2011		0	5.7	8.3	14.0
2012		0	5.7	8.3	14.0
2013		0	5.7	9.1	14.8
2014		0	7.7	8.9	16.6

다. 관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인적왕래의 규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빈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의 비중,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 이동의 자유화,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에서의 민족적 단결성, 마지막으로 정책협치의 정례화와 공동성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 관계통합을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배점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1) 인적 왕래

- 인적왕래 변인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방남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4년 인적왕래는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의 경우 이산가족 760명, 교육학술 100명, 체육 6명, 종교 186명, 대북지원 63명, 관광 33명으로 총 1148명이다.
- 2009년 이후로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 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2014년에는 366명(사회문화)의 남한 방문 통계치만이 확인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27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작년 11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선수 22명과 임원 10명 등 32명의 유소년 축구단을 초청한 바 있다.



- 이상의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 인원과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 인원 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방북 1148명+방남 366명(X2)=1880가 된다.
- 연간 인적왕래 수준의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인적왕래 비율 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2014년 인적왕래 변인의 총점은 1,880로 2013년 292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하였고, 기준점에 대한 비율은 2014년에는 0.03%로 이 수치는 지난해 보다 소 폭 증가한 것이다. 2014년 인적왕래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점 만점 중 0점이다. 상대점수가 0점인 이유는 기준점에 대한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지수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1989									1	0	0
1990									1,056	0	0
1991									762	0	0
1992									566	0	0
1993									36	0	0
1994									12	0	0
1995									536	0	0
1996									146	0	0
1997	0	1	0	0	4	11	151	-	167	0	0
1998	1	21	87	0	51	48	129	10,554	10,891	0.2	0
1999	5	1	106	125	39	4	364	148,008	148,652	2.1	0.4
2000	348	5	697	446	47	143	751	212,247	214,684	3.1	0.6
2001	436	76	134	312	86	82	803	57,285	59,214	0.9	0.2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2002	1,479	68	513	2,182	195	84	1,975	84,347	90,843	1.3	0.2
2003	233	396	34	1,552	584	253	1,670	73,922	78,644	1.1	0.2
2004	1,632	797	784	161	376	107	2,067	266,223	272,147	3.9	0.8
2005	247	273	286	955	1,231	1,242	6,669	301,153	312,056	4.5	0.9
2006	2,127	378	138	274	788	487	7,658	234,446	246,296	3.5	0.8
2007	3,207	865	331	1,624	4,779	289	13,119	345,006	369,220	5.3	1
2008	2,267	663	46	424	685	308	4,812	303,088	312,293	4.5	0.9
2009 ^{***}	1,449	112	0	23	103	0	761	0	2,574	0.04	0
	방남 63명(가중치 x2점)										
2010	754	95	0	3	77	7	684	0	1,620	0.02	0
	방남 0명										
2011	0	44	3	0	133	2	946	0	1,156	0.02	0
	방남 14명 (사회문화 1명, 대북 지원 13명)										
2012	1	0	2	0	77	2	117	33	232	0	0
	방남 0명										
2013	0	9	0	41	53	0	35	74	292	0	0
	방남 40명 (사회문화 40명 가중치 x2점)										
2014	760	100	6	0	186	0	63	33	1,880	0.03	0
	방남 366명 (사회문화 366명 가중치 x2점)										

* 1989~1996년 기간은 분야별 통계가 없고 합계 통계만 있어 가중치 총점만 산출함

**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음

*** 2009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자료에는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되어 있음

※ 자료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1	0	0	3	3	7	1.17	0.2	
1998	6	6	0	10	10	32	5.33	1	
1999	1	7	65	9	2	84	14	2.8	
2000	2	9	51	9	12	83	13.83	2.8	
2001	13	10	39	11	11	84	14	2.8	
2002	15	19	45	17	9	105	17.5	3.6	
2003	24	11	24	22	21	102	17	3.4	
2004	19	12	6	24	21	82	13.67	2.8	
2005	32	19	29	68	75	223	37.17	7.4	
2006	37	25	36	58	61	217	36.17	7.2	
2007	85	32	77	119	44	357	59.5	12	
2008	57	14	30	58	35	194	32.3	6.4	
2009	9	0	2	15	0	(26)	36	6	1.1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0	8	0	1	15	3	(27)	27	4.5	0.9
	방남 0건					0			
2011	7	1	0	13	1	(22)	24	4	0.8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2012	0	1	0	8	1	(10)	10	1.67	0.3
	방남 0건					(0)			
2013	1	0	1	3	0	(4)	8	1.33	0.2
	방남 2건(가중치 x2점)*					(4)			
2014	8	2	0	12	0	(22)	32	5.33	1.0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 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3)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

- 2014년 사회문화영역에 정부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¹⁵⁾은 인적왕래지원에 4억 6000만원, 사회문화협력지원에 28억 4700만원, 이산가족교류지원에 30억 8300만원, 인도적 지원(무상)에 147억 6500만원으로 총 211억 5500만원이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¹⁶⁾, 2014년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약 1423조 8000억원으로 2014년 GNI 대비 사회문화영역에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은 0.0015% 수준에 그쳐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 국민총소득(GNI) 대비 교류협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0.12%를 연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기준점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교류협력기금 지출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기준점 대비 2014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비율은 1.25%로 2013년 1.0%에 비해 0.25점 상승하였다. 최종적으로 2014년 사회문화 남북협력기금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0점(20점 만점)이다.

〈표 1-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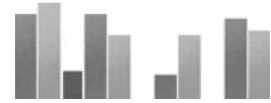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연도 \ 구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0	0	0

15) 통일부, “2014년 12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16) 한국은행, “2014년 국민계정(잠정)” (2015년 3월 25일 공보 2015-3-27호)

연도 \ 구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점수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1,824	0.03	25.0	3
1996	55	0.001	0.8	0
1997	191	0.003	2.5	0.6
1998	199	0.003	2.5	0.6
1999	343	0.005	4.2	0.8
2000	1,896	0.03	25.0	3
2001	1,182	0.02	16.7	3.4
2002	2,450	0.04	33.3	6.6
2003	3,110	0.05	41.7	8.4
2004	2,319	0.04	33.3	6.6
2005	3,904	0.06	50.0	10
2006	2,391	0.04	33.3	6.6
2007	4,032	0.06	50.0	10
2008	845	0.005	4.2	0.8
2009	345	0.003	2.5	0.6
2010	233	0.002	1.67	0.34
2011	129	0.001	0.83	0
2012	52	0.0002	0.17	0
2013	174	0.0012	1.0	0
2014	212	0.0015	1.25	0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한국은행 2014년 국민계정(잠정)



(4)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연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의 기준점은 13,000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산가족 상봉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2014년에는 이산가족 교류가 2차례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수는 760명으로 상대점수는 10점 만점 중 0.6점이다.

〈표 1-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89	0	0	0
1990	0	0	0
1991	0	0	0
1992	0	0	0
1993	0	0	0
1994	0	0	0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0.01	0
1999	5	0.04	0
2000	348	2.68	0.3
2001	296	2.28	0.2
2002	1,479	11.38	1
2003	233	1.79	0.2
2004	1,624	12.49	1.2

구분 연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2005	239	1.84	0.2
2006	2,127	16.36	1.6
2007	3,207	24.67	2.5
2008	2,267	17.44	1.7
2009	1,449	11.1	1.1
2010	754	5.8	0.6
2011	0	0	0
2012	1	0.01	0
2013	0	0	0
2014	760	5.8	0.6

※ 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5) 인적 이동의 자유화

- 기존의 관광자유화 변인은 2009년 남북통합지수부터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관광분야의 인적 이동과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을 합한 것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자 입국수가 추가되었다.
-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남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인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현재, 관광분야의 경우 남한 주민의 북한지역 방문만이 가능한 상태이며, 경제분야의 경우는 남북한 주민의 쌍방 지역 방문이 가능한 상태이다.
-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에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times 2$ 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관광 분야의 인적 이동은 2009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과 2010년 5.24조치 이후 개성관광이 중단된 이후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0명이었다가 2012년에 들어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74명의 인적 이동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33명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은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로 2013년 75,990명에서 2014년 126,01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탈북자 입국 수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4년에는 1,397명이다.
- 연간 인적 이동의 자유화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동 인원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2014년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13년 보다 0.1점 상승한 0.5점(20점 만점)이다.

〈표 1-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자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점수
		방북	방남*				
1989	0	-	-	-	-	0	0
1990	0	-	-	-	-	0	0
1991	0	-	-	-	-	0	0
1992	0	-	-	-	-	0	0
1993	0	-	-	-	-	0	0
1994	0	-	-	-	-	0	0
1995	0	-	-	-	-	0	0
1996	0	-	-	-	-	0	0
1997	0	-	-	-	-	0	0
1998	10,554	2,193	0	-	12,747	0	0

1999	148,008	2,288	0	-	150,296	0	0
2000	212,247	2,800	15	-	215,062	0	0
2001	57,285	1,162	19	-	58,466	0	0
2002	84,347	2,762	115	1,142	88,366	1.3	0
2003	73,922	5,208	82	1,285	80,497	1.2	0
2004	266,223	18,250	120	1,898	286,491	4.1	0.8
2005	301,153	69,682	50	1,384	372,269	5.3	1.1
2006	234,446	87,845	13	2,028	324,332	4.6	0.9
2007	352,433	130,006	213	2,554	485,206	6.9	1.4
2008	303,088	176,970	78	2,803	482,939	6.9	1.4
2009	0	118,303	183	2,914	121,583	1.7	0.3
2010	0	128,346	132	2,402	131,012	1.9	0.3
2011	0	114,919	0	2,706	117,625	1.7	0.3
2012	33	120,128	0	1,502	121,664	1.7	0.3
2013	74	75,990	0	1,514	77,578	1.1	0.4
2014	33	126,014	0	1,397	127,444	1.8	0.5

* 북한의 남한방문은 x2점 가중치 부여

※ 자료 출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6) 언론·방송의 자유화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서 언론·방송부문의 자유화 변인은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로 나뉘며, 또 각 세부 지표는 모색, 제도화, 활성화로 하위 평가 단계를 가진다. 각 지표와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08년 10월에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8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1-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언론·방송의 자유화 (20점)	세부지표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
	배점	5	10	15	20
	세부배점	모색(1) 제도화(3) 활성화(5)	모색(6) 제도화(8) 활성화(10)	모색(11) 제도화(13) 활성화(15)	모색(16) 제도화(18) 활성화(20)

〈표 1-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89	방송, 신문에서 북한·통일 관련 고정 프로그램, 지면 마련 (예: KBS의 '남북의 창' 등)	일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1
1990		"	1
1991		"	1
1992		"	1
1993		"	1
1994		"	1
1995		"	1
1996		"	1
1997		"	1
199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허가	일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3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99		"	3
2000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언론·방송 교류 활성화	일방향 교류의 활성화 단계	5
2001		"	5
2002		"	5
2003		"	5
2004		"	5
2005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공식 발족	쌍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6
2006		"	6
2007		"	6
2008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 기사교류합의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8
2009		"	8
2010		"	8
2011		"	8
2012		"	8
2013		"	8
2014		"	8

(7)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 2014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대회는 2011년, 2012년,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없어 0점이 부여된다.



〈표 1-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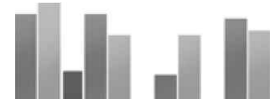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연도	구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 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2	2	2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1	1	1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1	1	1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0	0	0	0
2010		0	0	0	0

연도	구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 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0	0

※ 자료출처 : 통일부 (www.unikorea.go.kr)

(8)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은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당국자 회담(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매개기구] 구성(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 단, 합의서의 경우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2점을, 공동보도문의 경우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1.5점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은 “회담 수+합의서 채택수×2+공동보도문×1.5”로 산출된다.
- 2014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당국자 회담이 2회 개최되었다. 이는 2014년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7월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이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회담 2회 + 합의서 채택 0건×2 +공동보도문 0×1.5)은 2점이 된다.
- 남북당국자 회담의 상대점수는 연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기준점을 24회로 하고 상대점수를 회담 비율 1%가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당국자 간 회담 총점인 2점을 상대점수로 환산하면 0.9점으로 2013년과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표 1-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연도	구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89		9	0	0	0	0	9	37.5	3.8
1990		7	0	0	0	0	7	29.17	3
1991		7	4	8	0	0	15	62.5	6.3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0	0	0	0	0	0	0	0
1999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2002		2	1	2	0	0	4	16.67	1.7
2003		1	1	2	0	0	3	12.5	1.3
2004		1	1	2	0	0	3	12.5	1.3
2005		6	2	4	1	1.5	11.5	47.92	4.8
2006		3	0	0	0	0	3	12.5	1.3
2007		6	0	0	3	4.5	10.5	43.75	4.4
2008		1	1	2	0	0	3	12.5	1.3
2009		2	1	2	0	0	4	16.7	1.7
2010		4	1	2	0	0	6	25	2.5
2011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2013		1	1	2	0	0	3	12.5	1.3
2014		2	0	0	0	0	2	8.3	0.9

※ 출처 : 남북회담 <http://dialogue.unikorea.go.kr> (연도별 남북회담현황-회담통계)

- 공동협의기구의 경우는 구성에 10점이 배점되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10점이 추가 배점된다.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2007년에 처음 구성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운용되지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항목의 점수는 10점이다.
- 최종적으로, 2014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에 부여되는 상대점수는 당국자 회담의 0.9점, 공동협의기구 구성의 10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10.9점이다.

〈표 1-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89	3.8	0	0	3.8
1990	3	0	0	3
1991	6.3	0	0	6.3
1992	0	10	5*	15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7	0	0	1.7
2003	1.3	0	0	1.3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2004	1.3	0	0	1.3
2005	4.8	0	0	4.8
2006	1.3	0	0	1.3
2007	4.4	10	0	14.4
2008	1.3	10	0	11.3
2009	1.7	10	0	11.7
2010	2.5	10	0	12.5
2011	0	10	0	10
2012	0	10	0	10
2013	1.3	10	0	11.3
2014	0.9	10	0	10.9

* 1992년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에서 5점을 부여한 것은 1992년 3월~10월까지 총 6차례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매년 12회(10점 만점) 개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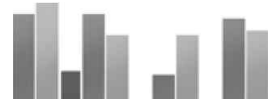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최종적으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제도통합지수와 관계통합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 수준을 단계로 제시한다.

■ 제도적 통합지수 16.6과 관계적 통합지수 21.1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2014년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37.6점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14년 구조통합지수는 2013년 34.7점에 비해 2.9점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공동법제화, 인적왕래,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집행,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의 단일화,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에서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남북한 사회문화 제도의 단일화, 공동행사,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인적 이동 자유화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

〈표 1-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화 (20)	언론/ 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20)	정례화 (30)		
1989	0	0	1.1	0	0	0	0	0	1	0	3.8	5.9	0단계
1990	0	0	1.1	0	0	0	0	0	1	0	3	5.1	0단계
1991	0	0	1.1	0	0	0	0	0	1	2	6.3	10.4	0단계
1992	0	0	1.3	0	0	0	0	0	1	0	15	17.3	1단계
1993	0	0	1.5	0	0	0	0	0	1	0	0	2.5	0단계
1994	0	0	1.6	0	0	0	0	0	1	0	0	2.6	0단계
1995	0	0	1.9	0	0	3	0	0	1	0	0	5.9	0단계
1996	0	0	2.2	0	0	0	0	0	1	0	0	3.2	0단계
1997	0	0	3.2	0	0.2	0.6	0	0	1	0	0	5.0	0단계
1998	0	0	6.9	0	1	0.6	0	0	3	0	0	11.5	1단계
1999	0	0	7.0	0.4	2.8	0.8	0	0	3	0	0	14	1단계
2000	0	0	7.1	0.6	2.8	3	0.3	0	5	1	0	19.8	1단계
2001	0	0	7.2	0.2	2.8	3.4	0.2	0	5	0	0	18.8	1단계
2002	0	0	7.2	0.2	3.6	6.6	1	0	5	0	1.7	25.3	2단계
2003	0	0	7.4	0.2	3.4	8.4	0.2	0	5	0	1.3	25.9	2단계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화 (20)	언론/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20)	정례화 (30)		
2004	0	0	7.5	0.8	2.8	6.6	1.2	0.8	5	1	1.3	27.0	2단계
2005	0	0.9	7.5	0.9	7.4	10	0.2	1.1	6	0	4.8	38.8	2단계
2006	0	1.7	7.5	0.8	7.2	6.6	1.5	0.9	6	0	1.3	33.5	2단계
2007	0	2.6	9.1	1	12	10	2.5	1.4	6	0	14.4	59.0	3단계
2008	0	3.5	9.1	0.9	6.4	0.8	1.7	1.4	8	0	11.3	43.1	3단계
2009	0	5	9.2	0	1.1	0.6	1.1	0.3	8	0	11.7	37.0	2단계
2010	0	5.7	8.2	0	0.9	0.34	0.6	0.3	8	0	12.5	36.6	2단계
2011	0	5.7	8.3	0	0.8	0	0	0.3	8	0	10	33.1	2단계
2012	0	5.7	8.3	0	0.3	0	0	0.3	8	0	10	32.6	2단계
2013	0	5.7	9.1	0	0.2	0	0	0.4	8	0	11.3	34.7	2단계
2014	0	7.7	8.9	0	1.0	0	0.6	0.5	8	0	10.9	37.6	2단계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지표의 만점의 수치를 나타냄

〈표 1-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1989	1.1	4.8	5.9
1990	1.1	4	5.1
1991	1.1	9.3	10.4
1992	1.3	16	17.3
1993	1.5	1	2.5
1994	1.6	1	2.6
1995	1.9	4	5.9
1996	2.2	1	3.2
1997	3.2	1.8	5.0
1998	6.9	4.6	11.5
1999	7.0	7.4	14.4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2000	7.1	13.3	20.4
2001	7.2	11.6	18.8
2002	7.2	18.3	25.5
2003	7.4	18.7	26.1
2004	7.5	19.5	27.0
2005	8.4	30.4	38.8
2006	9.2	24.3	33.5
2007	11.7	47.3	59.0
2008	12.6	30.5	43.1
2009	14.2	22.8	37.0
2010	13.9	22.7	36.6
2011	14.0	19.1	33.1
2012	14.0	18.6	32.6
2013	14.8	19.9	34.7
2014	16.6	21.0	37.6

〈그림 1-5〉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표 1-59〉 2014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통합 영역	지표	2013 년	2014 년	증감	요인
제도적 통합	공동집행기구	0	0	-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단일 제도화	5.7	7.7	+2.0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이 조성(남북한 주민의 이동전화 이용률 반영)됨으로써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이 높아짐
	공동 법제화	9.1	8.9	-0.2	전문가 평가에서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 법제화 수준이 다소 하락함. 하지만 '드레스덴 통일 구상' 선언 이후의 지속적인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으로 남북한 공동 법제의 구속력이 높아짐
관계적 통합	인적 왕래	0	0	-	인적왕래의 총량수치는 다소 늘었으나 기준점 비율에 대한 상대점수로 환산했을 때에는 변화가 없음
	공동행사	0.2	1.0	+0.8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분야의 공동행사 증가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집행	0	0	-	기금 집행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기준점 비율에 대한 상대점수로 환산했을 때 변화가 없음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0	0.6	+0.6	이산가족 상봉이 두 차례 있었음
	인적 이동의 자유화	0.4	0.5	+0.1	경제 분야의 인적이동(방북)의 증가와 탈북자 입국 수 지표가 추가되면서 약간의 지수 변화가 있음
	언론방송의 자유화	8	8	-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2008년 이후 합의된 기사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함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0	0	-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대회가 전혀 없음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11.3	10.9	-0.4	공동합의서와 보도문이 전혀 없었음
계	34.7	37.6	+2.9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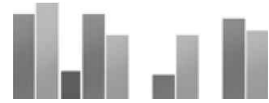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배점은 250점이다. 정치 영역과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0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0점씩 배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영역	남북한 공통	통일의 필요성	20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
		남북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10
	소계	80	
경제영역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소계	80		
사회문화 영역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20



영역	변인	배점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
	소계	90
합계		250

-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15년 남북통합지수에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한주민의 경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7월 1일~7월 22일에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남녀 1,200명을 유효 표본으로 실시한 “2014 통일의식조사” 자료이고, 북한주민의 경우 동 기관이 2015년 5월 22일~7월 4일에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22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5 북한주민 의식조사” 자료이다.
-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를 실시한다. 북한주민 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총 7차례(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측정되는 의식의 기준연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 기존 조사의 표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의 조사부터는 이전 해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15년의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22명 모두는 2014년 1월~12월까지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이다.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2-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남한주민 설문내용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북한주민 설문내용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1) 남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 통일에 대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은 2014년 55.5%으로 전년 대비 6.9% point 증가하였다. 2009년, 2010년의 53% 수준에서, 2013년 48.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4년에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하락하였고, 2014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26.7%를 기록하였다.



■ 즉, 통일에 대한 집단적 기대감은 및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4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점수 역시 8.2점으로 전년 대비 1.2점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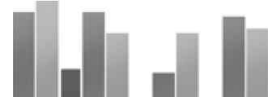
〈표 2-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9	질문: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53.2	7.7/20
	질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23.9	
2010	”	53.5	7.8/20
	”	24.8	
2011	”	50.7	7.9/20
	”	27.8	
2012	”	51.6	7.8/20
	”	26.0	
2013	”	48.6	7.0/20
	”	21.8	
2014	”	55.5	8.2/20
	”		

나)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 2013년 조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61.8%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46.3%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두 질문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이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반면, 2014년 조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이 62.2%, 47.0%로 전년 대비 각각 0.4% point, 0.7% point씩 소폭 증가하여, 한반도 긴장 국면으로 인한 하락세를 약간이나마 회복하였다. 이는 2013년의 남북 관계 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대점수도 전년보다 0.1점 상승한 5.5점을 기록하였다.



〈표 2-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9	질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64.2	5.9/10
	질문: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54	
2010	”	68.6	6.0/10
	”	52.3	
2011	”	61.5	5.6/10
	”	50.7	
2012	”	65.3	5.9/10
	”	53.4	
2013	”	61.8	5.4/10
	”	46.3	
2014	”	62.2	5.5/10
	”	47.0	

다)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선호

■ 과거에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2013년 통일의식조사부터 삭제됨에 따라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의 평균을 통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 2014년 대북 지원 선호 정도에 대한 점수는 3.3점으로 2013년의 2.7점에서

0.6점 상승하였다. 2013년 이전의 점수를 새로운 지수 산출 방식으로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2014년의 대북 지원 선호도는 2013년의 큰 폭 하락을 상쇄하고,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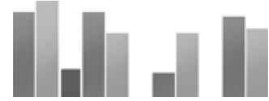
〈표 2-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9	질문: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와 “조금 늘려야 한다” 선택	18.9	1.9/10
2010	”	24.7	2.5/10
2011	”	22.3	2.2/10
2012	”	23.8	2.4/10
2013	질문: (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	27.4	2.7/10
2014	”	32.8	3.3/10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2013년부터 ‘통일의식조사’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질문으로 대체

** 2013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년도의 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음.

2009년 3.4점, 2010년 3.3점, 2011년 3.3점, 2012년 3.2점



(2) 북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2009년에는 85.4%로 가장 높은 비율이 조사되었으나, 2010년 66.3%, 2011년 61.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2년 72.1%로 반등한 이래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5% point 상승한 76.6%를 기록하였다.
- 한편, 북한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을 선택한 빈도는 2009년 19.4%, 2010년 17.7%, 2011년 20.8%, 2012년 21.8%, 2013년 18.1%로 20%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8.7%를 기록하였다.
- 즉, 2014년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와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필요성’ 대한 답변이 전년 대비 각각 1.5% point, 10.6% point 상승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에도 주목되는 경제개혁 조치 부재한 가운데, 군사적 도발 시도 등으로 북한 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개성 공단 재개, 중국과의 교역 증가 등 경제활동 경험이 증가하면서 북한 경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북한체제 평가 및 시장경제 부문의 상대점수는 2013년의 7.0점에서 2014년 7.9점으로 0.9점 상승하였다.

〈표 2-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귀하는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합니까?” 응답: “자본주의 지지” 선택	66.3	6.3/15
	질문: “귀하는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 선택	17.7	
2011	”	61.6	6.2/15
	”	20.8	
2012	”	72.1	7.0/15
	”	21.8	
2013	”	75.1	7.0/15
	”	18.1	
2014	”	76.6	7.9/15
	”	28.7	

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

- 2010년 설문조사부터는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문항에서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인지도’ 설문은 삭제하고 조사하였다.
- ‘남한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 평가’는 이전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반등하였다.
- ‘남한의 대북 지원 여부를 북한주민이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서 71.3%가 있다고 답해 전년 62.4%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해 2009년 70%대였던 인지도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1년과 2012년에 7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13년에는 73.0%로 다소 하락한 이후 2014년 조사에서는 74.6%로 소폭 상승하여 이전 수준에 근접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3년의 남북관계의 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이 활발해 지면서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 모두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종합하면, ‘대북 지원의 인지도’와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모두 증가하여, 상대점수는 전년보다 0.7점 상승한 10.9점을 기록하였다.

〈표 2-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9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 성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67.8	10.9/15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70.8	
	질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80.5	
2010	질문지 삭제		10.1/15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64.0	
	질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67.3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1	질문지 삭제		10.8/15
	2010년과 상동	67.7	
	"	76.1	
2012	질문지 삭제		10.8/15
	2010년과 상동	66.2	
	"	77.5	
2013	질문지 삭제		10.2/15
	2010년과 상동	62.4	
	"	73.0	
2014	질문지 삭제		10.9
	2010년과 상동	71.3	
	"	74.6	

다)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우호도

- 2010년 설문조사부터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우호도’ 질문에서 ‘남한기업의 대우’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고 조사하였다.
-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2009년 76.7%로 조사된 이후, 2010년 79.3%, 2011년 87.7%, 2012년 85.7%, 2013년 85.2%로 조사되어 2011년 이후 80% 중반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대폭 하락하여 76.3%를 기록하였다.
- 상대점수는 전년 8.5점보다 0.9점 하락한 7.6점을 기록하였다.



〈표 2-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9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76.7	7.0/10
	질문: “귀하는 앞으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한다면 남한 기업이 어떠한 조건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북한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와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선택	64.1	
2010	2009년과 상동	79.3	7.9/10
	질문지 삭제		
2011	2009년과 상동	87.7	8.8/10
	질문지 삭제		
2012	2009년과 상동	85.7	8.6/10
	질문지 삭제		
2013	2009년과 상동	85.2	8.5/10
	질문지 삭제		
2014	2009년과 상동	76.3	7.6/10
	질문지 삭제		

(3) 종합

■ 지난 6년간 의식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점수의 흐름은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등락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09년 15.5점 → 2010년 16.3점 → 2011년 15.7점 → 2012년 16.1점 → 2013년 15.1 → 2014년 17.0점으로 2012년까지는 비교적 소폭의 등락이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3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점수가 하락한 뒤, 2014년에는 긴장 국면의 해소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이 맞물리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특히, ‘통일에 대한 이익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응답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상대 점수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는 ‘통일 대박론’으로 대표되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남한 내의 여론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반해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점수는 두 차례의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09년 25.8점 → 2010년 24.3점 → 2011년 25.8점 → 2012년 26.4점 → 2013년 25.7점 → 2014년 26.4점으로 2010년과 2013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태, 2013년 남북관계 긴장) 하락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이상을 남북한 의식지수를 종합한다면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3년 40.8에서 2014년 43.4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표 2-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09	남한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7/20	15.5/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9/10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북한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9/15	25.8/40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9/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10	
총점			41.3/80	
2010	남한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6.3/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0/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5/10	
	북한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6.3/15	24.3/40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1/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9/10	
총점			40.6	
2011	남한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9/20	15.7/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6/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2/10	
	북한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6.2/15	25.8/40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8/10	
총점			41.5	
2012	남한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6.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4/10	
	북한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6.4/40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6/10	
총점			42.5	
2013	남한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0/20	15.1/40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4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7/10		
	북한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5.7/40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2/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5/10		
	총점			40.8	
	남한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2	17.0/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3.3	
		북한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9	26.4/40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9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6		
총점			43.4		

나. 정치

■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2-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통일의 필요성	10	10
남북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10	10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10	1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5	5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5	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했다. 2014년 남한주민은 55.9%, 북한주민은 98.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주민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5.6점, 9.8점으로 총 15.4점(20점 만점)이 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점수는 2008년 14.7점, 2009년 15.2점, 2010년 15.5점, 2011년 14.8점, 2012년 15.0점, 2013년 15.5점을 기록하였다.

〈표 2-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필요하다” 선택	51.6	5.2
	북한주민		95.2	9.5
2009	남한주민	"	55.8	5.5
	북한주민		97.0	9.7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 “필요하다” 선택	59.0	5.9
	북한주민		95.5	9.6
2011	남한주민	"	53.7	5.4
	북한주민		93.8	9.4
2012	남한주민	"	57.0	5.7
	북한주민		93.3	9.3
2013	남한주민	"	54.8	5.5
	북한주민		100.0	10
2014	남한주민	"	55.9	5.6
	북한주민		98.3	9.8

나)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적이라고 인식하면 의식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의 선거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각각 9.0%였고, 북한주민은 2.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0.9점, 0.3점이 된다. 이 둘을 합하면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1.2점(20점 만점)이다. 2008년 0.8점, 2009년 0.7점, 2010년 1.3점, 2011년 1.0점, 2012년 0.9점, 2013년 1.8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0.6점 하락한 수치이다.

〈표 2-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질문2 응답률(%)	평균 응답률(%)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7	4.9	5.3	0.5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5	2.3	2.9	0.3
2009	남한주민	"	4.2	4.2	4.2	0.4
	북한주민		3.5	3.0	3.3	0.3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2	11.3	8.8	0.9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8	-	3.8	0.4
2011	남한주민	"	6.1	-	6.1	0.6
	북한주민	"	3.8	-	3.8	0.4
2012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	2.3	-	2.3	0.2
2013	남한주민	"	8.6	-	8.6	0.9
	북한주민	"	9.0	-	9.0	0.9
2014	남한주민	"	9.0	-	9.0	0.9
	북한주민	"	2.5	-	2.5	0.3



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정치 통합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남한주민은 25.1%가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주민은 51.6%가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2.5점, 5.2점으로 총 7.7점이 된다. 이 부분의 총 점수는 2008년 11.7점,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 2012년 8.5점, 2013년 7.0점과 비교해 전년 대비 0.7점 상승한 수치이다.

〈표 2-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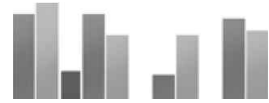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의(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47.8	4.8
	북한주민		68.7	6.9
2009	남한주민	"	37.3	3.7
	북한주민		58.4	5.8
2010	남한주민	"	32.5	3.2
	북한주민		36.9	3.7
2011	남한주민	"	21.7	2.2
	북한주민		44.7	4.5
2012	남한주민	"	31.1	3.1
	북한주민		54.2	5.4
2013	남한주민	"	34.0	3.4
	북한주민		36.2	3.6
2014	남한주민	"	25.1	2.5
	북한주민		51.6	5.2

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에 유용한 변인이다. 남한주민은 58.8%가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북한주민은 68.1%가 남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북한이 각각 2.9점, 3.4점으로 총 6.3점이 된다.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 대비 0.1점 상승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인식도 0.1점 상승하였다. 총 점수는 2008년 7.4점, 2009년 7.2점, 2010년 6.2점, 2011년 6.7점, 2012년 6.9점, 2013년 6.1점과 비교해, 전년 대비 0.2점 상승했다.

〈표 2-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북한이(남한이) 귀하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지원대상” + “협력대상” 선택	79.5	4.0
	북한주민		67.8	3.4
2009	남한주민	"	68.1	3.4
	북한주민		75.7	3.8
2010	남한주민	"	64.0	3.2
	북한주민		60.2	3.0
2011	남한주민	"	63.7	3.2
	북한주민		70.0	3.5
2012	남한주민	"	62.9	3.1
	북한주민		76.7	3.8
2013	남한주민	"	56.8	2.8
	북한주민		66.6	3.3
2014	남한주민	"	58.8	2.9
	북한주민		68.1	3.4



마)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57.6%), 주체사상(77.5%), 천리마운동(71.9%), 고난의 행군(60.0%), 장마당(47.5%), 아리랑축전(60.6%)에 대해 괄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62.5%였다. 북한주민들은 4.19 혁명(69.7%), 5.18 광주항쟁(81.2%), 88서울올림픽(68.8%), 2002 월드컵(68.0%), 세월호 사건(69.6%), 개성공업지구 운영(93.4%)에 대해 괄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5.1%였다. 한편, 북한주민은 남한의 쌀과 비료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71.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한 평균 인지도는 73.2%가 된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의 경우 3.1점, 북한의 경우 3.6점으로 총 6.7점이 된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인지도는 2008년 2.9점, 2009년 2.6점, 2010년 3.0점, 2011년 3.2점, 2012년 3.0점, 2013년 3.0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지도는 2008년, 2010년 3.4점, 2009년, 2011, 2012년 3.5점, 2013년 3.2점이었다가, 2014년 3.6점으로 0.4점 상승하였다. 종합인지도는 2008년 6.3점, 2009년 6.1점, 2010년 6.4점, 2011년 6.7점, 2012년 6.5점, 2013년 6.2점으로 전년에 비해 0.5점 상승한 점수이다.

〈표 2-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2008/2009)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8.6	2.9
	북한주민		68.7	3.4
200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2.8	2.6
	북한주민		70.8	3.5
2010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0.6	3.0
	북한주민		68.1	3.4
2011*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3.2	3.2
	북한주민		70.1	3.5
2012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0.7	3.0
	북한주민		70.7	3.5
2013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59.8	3.0
	북한주민		63.5	3.2
2014*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2.5	3.1
	북한주민		73.2	3.6

*2011년 북한주민 점수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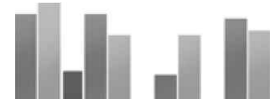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2014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2) 종합

-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50%씩 배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5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남북한의 상대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남북한 의식통합을 산출하였다. 2014년도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80점 만점에 37.3점이다.
- 2014년의 정치의식통합지수는 전년인 2013년과 비교하면 0.7점 상승, 2012년에 비해 0.1점 하락, 2011년에 비해 1.4점 상승, 2010년에 비해 1.0점 상승, 2009년에 비해 2.5점 하락, 2008년에 비해 3.6점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정치의식통합지수의 증가는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세 항목에서 나타났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이 2013년 7.0점에서 7.7점으로 0.7점 높아졌고,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13년 6.1점에서 6.3점으로 0.2점 높아졌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 6.2점에서 6.7점으로 0.5점 높아졌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의 항목에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9점 하락,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1.6점 상승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의 항목에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1점 상승,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도 0.1점 상승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항목에서는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1점 상승,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4점 상승하였다.
- 반면, 통일의 필요성 항목은 15.5점에서 15.4점으로 0.1점 하락하였고,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항목에서는 1.8점에서 1.2점으로 0.6점 하락하였다. 통일의 필요성 항목에서는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1점 상승한 반면,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2점 하락하였다.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항목에서는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6점 하락하였다.

- 남북한 주민의 정치통합의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는 2008년 40.9점, 2009년 39.8점, 2010년 36.3점, 2011년 35.9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남북관계 단절의 지속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군사적 대결의 강화는 의식통합지수에도 반영되었고, 특히,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은 2008-2011년 동안 변화 폭이 컸다. 2014년 남북한의 정치통합의식이 전년 대비 0.7점 상승한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상승한 결과이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2013년에 비해 0.6점 하락하여 15.0점을 보인 반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점수는 1.3점 상승하여 22.3점을 기록하였다.
-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은 2008년 11.7점에서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으로 하락하다가 2012년 소폭 상승한 8.5점을 기록한 뒤 2013년에 7.0점으로 하락하였다. 2014년은 다시 7.7로 상승하였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2013년 3.6점으로 2008-2013년 기간 중 최저점을 보였으나, 2014년에 다시 상승하여 5.2점이었다. 동일 항목에 대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는 2011년 2.2점으로 동일 기간 중 최저점을 보였다.
-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0.7점)이다. 전체 상승분(+1.4점) 중 50.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항목은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0.6점)이다. 전체 하락분(-0.7점) 중 85.7%를 차지했다.
- 세부적으로,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에서 각각 0.1점 상승하였고, 남북한 정치제도 동질성은 작년과 동일,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서는 0.9점 하락하였다.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



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에서 각각 1.6점, 0.1점 0.4점 상승,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의 두 항목에서 각각 0.2점, 0.6점 하락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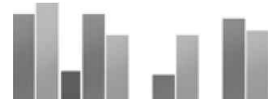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표 2-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8	통일의 필요성	5.2/10	9.5/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5/10	0.3/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10	6.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0/5	3.4/5	7.4/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9/5	3.4/5	6.3/10
	총점	17.4/40	23.5/40	40.9/80
2009	통일의 필요성	5.6/10	9.7/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4/10	0.3/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10	5.8/10	9.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 5	3.8/ 5	7.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6/ 5	3.5/ 5	6.1/10
	총점	15.7/40	23.1/40	39.8/80
2010	통일의 필요성	5.9/10	9.6/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4/10	1.3/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2/10	3.7/10	6.9/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0/ 5	6.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4/ 5	6.4/10
	총점	16.2/40	20.1/40	36.3/80
2011	통일의 필요성	5.4/10	9.4/10	14.8/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4/10	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2/10	4.5/10	6.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5/ 5	6.7/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2/ 5	3.5/ 5	6.7/10
	총점	14.6/40	21.3/40	35.9/80
2012	통일의 필요성	5.7/10	9.3/10	15.0/20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2/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1/10	5.4/10	8.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1/ 5	3.8/ 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5/ 5	6.5/10
	총점	15.6/40	22.2/40	37.8/80
2013	통일의 필요성	5.5/10	10/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9/10	1.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3.6/10	7.0/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1/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2/5	6.2/10
	총점	15.6/40	21.0/40	36.6/80
2014	통일의 필요성	5.6/10	9.8/10	15.4/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3/10	1.2/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5/10	5.2/10	7.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9/5	3.4/5	6.3/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1/5	3.6/5	6.7/10
	총점	15.0/40	22.3/40	37.3/80

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측정 지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5가지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최종점수는 남북한 주민 각각의 질문 응답 비율을 다시 각 변인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표 2-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통합영역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사회문화 의식의 통합 (총 90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10	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0	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	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0	10
	소계	45	4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얼마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 주민은 31.5%, 북한 주민은 87.7%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5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6점, 북한주민의 경우 4.4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비록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여,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약간 늘어나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났고, 북한 주민의 경우는 북한사회 내에 남한문화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남한문화의 소비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남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인지수준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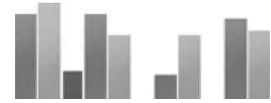
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으며, 2014년의 경우 남북한 간의 격차는 201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접해봄” 또는 “있다” 선택	31.2	1.6
	북한주민		64.7	3.3
2009	남한주민	"	46.2	2.3
	북한주민		56.5	2.8
2010	남한주민	"	37.4	1.9
	북한주민		77.3	3.9
2011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90.0	4.5
2012	남한주민	"	32.3	1.6
	북한주민		88.0	4.4
2013	남한주민	"	27.3	1.4
	북한주민		85.9	4.3
2014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87.7	4.4

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을 접촉하였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가를 질문하였다. 2009년 조사까지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각각에게 질문한 내용이 상이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0년 조사 때부터는 질문 문항의 표현을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그 결과, 남한 주민은 42.5%, 북한주민은 90.2%가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4.3점, 북한주민의 경우 9.0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에 4.0점에서 2013년 4.2점, 그리고 2014년 4.3점으로 2014년의 경우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 8.9점, 2013년 8.0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9.0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두 집단의 수용의식의 격차는 4.7포인트로 나타났다.
-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2015년 5월 기준으로 28,054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의 수용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호전적 행위가 계속되고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상황적 요인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접촉 경험이 증가한 만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출신 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 역시 증가하였다.

〈표 2-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36.2	3.6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응답: “친숙했음” 선택	72.1	7.2
2009	남한주민	”	36.3	3.6
	북한주민	”	52.1	5.2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남한주민	“ ”	42.5	4.3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1.9	9.2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0.9	4.1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0	9.0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39.5	4.0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1	8.9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	4.2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79.9	8.0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5	4.3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2	9.0

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남북한 주민에게 각각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남한 주민은 13.9%, 북한주민은 15.6%가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대감 해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인 점수는 적대감의 역응답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한주민의 경우 역응답률 86.1%에 대한 상대점수는 8.6점, 북한주민의 역응답률 84.4%에 대한 상대점수는 8.4점이 부여된다.

■ 2009년에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2013년 12월 장성택의 공개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도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 적대감 해소의 수준은 2008년 이



후 2011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0.6포인트가 올라 8.9점을 나타내었고 2013년에 들어 0.5점 하락하였지만 2014년에 다시 0.2점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1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답보 상태였으나 2012년에는 0.2포인트가 올라 8.7점을 보였고 2013년에 0.7점 하락하였지만 2014년에는 8.4점을 나타냈다.

〈표 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역응답률(%)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이 북한[남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응답: “적대대상” 선택	5.3	94.7	9.5
	북한주민		20.9	79.1	7.9
2009	남한주민	"	9.0	91.0	9.1
	북한주민		11.4	88.6	8.9
2010	남한주민	"	12.0	88.0	8.8
	북한주민		15.5	84.5	8.5
2011	남한주민	"	16.8	83.2	8.3
	북한주민		15.4	84.6	8.5
2012	남한주민	"	10.9	89.1	8.9
	북한주민		12.8	87.2	8.7
2013	남한주민	"	16.4	83.6	8.4
	북한주민		20.1	79.9	8.0
2014	남한주민	"	13.9	86.1	8.6
	북한주민		15.6	84.4	8.4

라)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 남북한 간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양식(언어, 생활풍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주민은 16.6%, 북한주민은 10.7%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7점, 북한주민의 경우 1.1점이 부여된다.
- 앞서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에서 큰 격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북한주민에 비해 남한주민이 느끼는 동질감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남한주민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 주민	질문1: 언어사용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1: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17.5	17.6	17.6	1.8
	북한 주민	질문2: 생활풍습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2: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6.6	12.4	9.5	1.0
2009	남한 주민	"	7.2	11.8	9.5	1.0
	북한 주민		4.6	7.3	6.0	0.6
2010	남한 주민	"	10.8	13.3	12.05	1.2
	북한 주민		5.8	4.8	5.3	0.5



2011	남한 주민	"	9.1	11.6	10.4	1.0
	북한 주민		2.3	11.6	7.0	0.7
2012	남한 주민	"	11.8	14.3	13.0	1.3
	북한 주민		5.3	10.5	7.9	0.8
2013	남한 주민	"	14.7	14.2	14.45	1.5
	북한 주민		4.7	8.1	6.4	0.6
2014	남한 주민	"	16.4	16.7	16.55	1.7
	북한 주민		6.6	14.7	10.65	1.1

마)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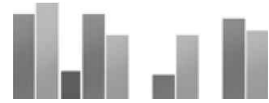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2009년까지는 남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간에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남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 하지만 2010년부터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남한주민은 13.6%, 북한주민은 81.2%가 통일 이후에 빈부의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4점, 북한주민의 경우 점이 8.1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2012년 1.2점→ 2013년 1.5→2014년 1.4점으로 2014년의 경우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북한주민의 경우 2012년 8.7점→ 2013년 8.5점→ 2014년 8.1점으로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수치 변화가 있지만 남북한의 큰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다.

〈표 2-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0.6	1.1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 선택	38.5	3.9
2009	남한주민	“ ”	14.7	1.5
	북한주민	“ ”	44.0	4.4
2010	남한주민	“ ”	15.9	1.6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81.4	8.1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1	1.3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78.4	7.8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2.3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6.5	8.7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4.8	1.5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5.3	8.5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6	1.4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1.2	8.1



(2) 종합

- 2014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8.6점으로 2013년 46.4점에 비해 2.2포인트가 상승하였다. 특히, 의식통합지수의 측정이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제외한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모두에서 작년 대비 상승한 것이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의 상승을 이끌었다.
- 특히,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이 전년도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항목은 남한 주민(2013년 4.2→2014년 4.3)과 북한 주민(2013년 6.0→2014년 9.0) 모두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남한 주민보다 오히려 북한 주민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의 증가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 등 상대방의 사회문화 접촉 경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용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이후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였다(2011년 9.1→2012년 9.9→2013년 10.0). 그런데 2014년에 다시 하락한 데는 남한 경제의 침체 또는 불황이 계속되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흥미로운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일방의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형성에서 ‘거울영상 효과(mirror image effect)’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으로 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동 추이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상태가 상황적인 요인에(특히 2014년의 경우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의 참여 등의 영향이 큼)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남 1.6 vs. 북 4.4),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남 4.3 vs. 북 9.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1.4 vs. 8.1) 항목들에서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남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이 점은 정책적으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남한 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통합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3.3/5	4.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7.2/10	10.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10	7.9/10	17.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8/10	1.0/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1/10	3.9/10	5/20
	총점	17.6/45	23.3/45	40.9/90
200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2.3/5	2.8/5	5.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5.2/10	8.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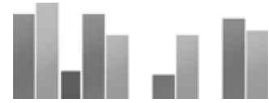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1/10	8.9/10	1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6/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4.4/10	5.9/20
	총점	17.5/45	21.9/45	39.4/90
20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9/5	3.9/5	5.8/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1/10	13.4/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5/10	17.3/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2/10	0.5/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6/10	8.1/10	9.7/20
	총점	17.8/45	30.1/45	47.9/90
201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5/5	6.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1/10	9.0/10	13.1/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10	8.5/10	16.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7/10	1.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3/10	7.8/10	9.1/20
	총점	16.3/45	30.5/45	46.8/90
2012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8.9/10	12.9/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7/10	17.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3/10	0.8/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7/10	9.9/20
	총점	17.0/45	31.5/45	48.5/90
2013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4/5	4.3/5	5.7/1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8.0/10	12.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8.0/10	16.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0.6/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5/10	10.0/20
	총점	17.0/45	29.4/45	46.4/90
201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0/10	13.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6/10	8.4/10	17.0/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1/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4/10	8.1/10	9.5/20
	총점	17.6/45	31/45	48.6/90

3. 종합

■ 2014년 남북의식통합지수는 정치영역 37.3점, 경제영역 43.4점, 사회문화영역 48.6점을 합한 결과 총점 129.3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2013년의 124점에서 5.3점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승은 영역별로 전년 대비 경제 2.6점, 정치 0.5점, 사회 2.2점 상승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전년에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것과 정반대로 2014년에는 모든 영역에서 의식통합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 남북의식통합지수의 상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과 ‘통일대박론’에 대한 기대



감,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 및 북한 실세 3인방의 남한 방문 등 전년과 다른 상황적 요인들이 의식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연도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23.7→2009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4.2→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으로 격년을 주기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동 패턴은 한편으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20점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 영역별로 연도별 추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경제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1.9→2009년 41.3→2010년 40.6→2011년 41.5→2012년 42.5→2013년 40.8→2014년 43.4로 전체 남북의식통합지수와 마찬가지로 격년 단위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동시에, 대체로 40점대 선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의식통합지수를 비교했을 때 경제영역에서도 2014년 의식통합지수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통일대박론’으로 대표되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남한 내의 여론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0.9→2009년 39.8→2010년 36.3→2011년 35.9→2012년 37.8→2013년 36.8→2014년 37.3으로 변화했다.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의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2014년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의 의식통합 수준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과 달리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수준은 2009년에 40점대에서 30점대로 떨어진 이후 다시 40대점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

또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적 요인이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역시 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으로 격년 주기로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역대 최고의 의식통합을 나타냈다. 2013년 남북관계의 상황(3차 핵실험, 개성공단 일시 폐쇄, 이산가족상봉의 무산, 장성택 처형 등)과 달리 2014년에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 등 인도적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의식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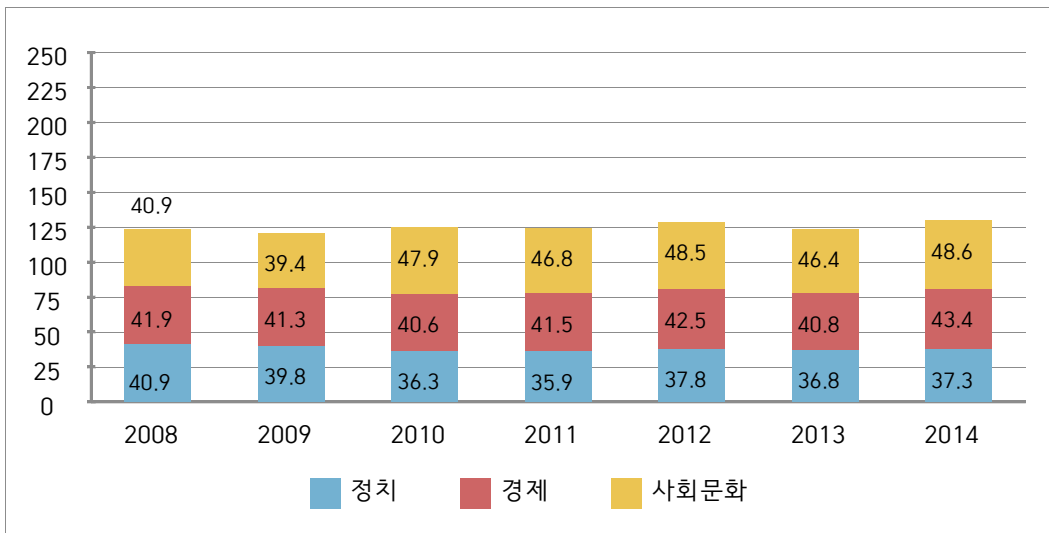
〈표 2-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영역	변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치 영역 (80)	남북한 공통	통일의 필요성	14.7	15.3	15.5	14.8	15.0	15.5	15.4
		정치제도 동질성	0.8	0.7	1.3	1.0	0.9	1.8	1.2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11.7	9.5	6.9	6.7	8.5	7.0	7.7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7.4	8.2	6.2	6.7	6.9	6.1	6.3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6.3	6.1	6.4	6.2	6.5	6.4	6.7
	소계	40.9	39.8	36.3	35.9	37.8	36.8	37.3	
경제 영역 (80)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5	7.7	7.8	7.9	7.8	7.0	8.2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	5.9	6.0	5.6	5.9	5.4	5.5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5	1.9	2.5	2.2	2.4	2.4	3.3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8.2	7.9	6.3	6.2	7.0	7.0	7.9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2	10.9	10.1	10.8	10.8	10.2	10.9



영역		변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2	7.0	7.9	8.8	8.6	8.5	7.6
	소계		41.9	41.3	40.6	41.5	42.5	40.8	43.4
사회문화영역 (90)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4.9	5.1	5.8	6.1	6.0	5.7	6.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10.8	8.8	8.8	13.1	12.9	12.2	13.3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7.4	18.0	17.3	16.8	17.6	16.4	17.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8	1.6	1.6	1.7	2.1	2.1	2.8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5.0	5.9	9.7	9.1	9.9	10.0	9.5
	소계		40.9	39.4	47.9	46.8	48.5	46.4	48.6
합계		만점 250점	123.7	120.5	124.8	124.2	128.8	124	1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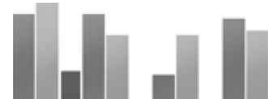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그림 2-1〉 의식통합지수 2008~2014년 변화 추이



3장

남북통합지수 : 2008~2014

- 2014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206.4점이다. 남북한의 통합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20.6%이다.
- 2014년 남북통합지수는 2013년 190.8에 비해 15.6점이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합률은 19.1%에서 20.6%로 1.5%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구조통합지수(제도적 통합지수와 관계적 통합지수의 합계)와 의식통합지수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다.
- 제도적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30.5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으며,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480점 만점 중 46.6점으로 전년 대비 8.1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0.2점이 상승했다. 또한 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9.3점으로 전년 대비 5.3점 상승하여 200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 영역별로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 모두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경제영역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69.7점으로 전년 대비 6.8점 상승하였고,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50.5점으로 전년 대비 3.9점 상승하였으며,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6.2점으로 전년 대비 5.1점 상승하였다.
- 관계통합지수를 보면, 46.6점으로 전년 대비 8.1점이 상승하였다. 경제영역에서는 개성공단 생산 재개에 따른 남북교역 증가 및 남한기업 고용 북한 노동자수의 증가, 상품 무역의 자유도 증가 등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인해 전년 대비 3.9점이 올랐다. 정치영역 역시 남북한 당국 간 접촉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날



북한실세 3인방의 남한 방문 등으로 전년 대비 3.2점이 상승했다. 또한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이산가족의 상봉과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였다.

- 제도통합지수는 30.5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경제영역은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부분에서 0.3점 상승했고, 사회문화영역은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지표가 세분화되어 산정됨으로써 전년 대비 1.8점 상승했다. 반면에 정치영역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의식통합지수는 세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경제영역은 전년 대비 2.6점, 정치영역은 0.5점, 그리고 사회문화영역은 2.2점 상승하였다. 특히, 예년과 달리 경제영역의 의식통합 수준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통일대박론’으로 대표되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통일 의식 제고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5/90	8.3	6.4/90	7.1	16.6/90	18.4	30.5/270	11.3
관계적 통합	18.8/160	11.8	6.8/160	4.3	21.0/160	13.1	46.6/480	9.7
의식의 통합	43.4/80	54.3	37.3/80	46.6	48.6/90	54.0	129.3/250	51.7
합계	69.7/330	21.1	50.5/330	15.3	86.2/340	25.4	206.4/1000	20.6

〈표 3-2〉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2/90	8.0	6.4/90	7.1	14.8/90	16.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14.9/160	9.3	3.6/160	2.3	19.9/160	12.4	38.5/480	8.0
의식의 통합	40.8/80	51.0	36.8/80	46	46.4/90	51.6	124/250	49.6
합계	62.9/330	19.1	46.6/330	14.1	81.1/340	23.9	190.8/1000	19.1

〈표 3-3〉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6/90	7.3	6.5/90	7.2	14.0/90	15.6	27.1/270	10.0
관계적 통합	18.2/160	11.4	4.9/160	3.1	18.6/160	11.6	41.7/480	8.7
의식의 통합	42.5/80	53.1	37.8/80	47.3	48.5/90	36.2	128.8/250	51.5
합계	67.3/330	20.4	49.2/330	14.9	81.1/340	23.8	197.6/1000	19.8

〈표 3-4〉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4.0/90	15.6	28.5/270	10.6
관계적 통합	17.4/160	10.9	6.4/160	4.0	19.1/160	11.9	42.9/480	8.9
의식의 통합	41.5/80	51.9	35.9/80	44.3	46.8/90	52	124.2/250	49.7
합계	66.6/330	20.2	49.1/330	14.7	79.9/340	23.5	195.6/1000	19.5



〈표 3-5〉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3.9/90	15.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20.7/160	12.9	4.8/160	3	22.7/160	14.2	48.2/480	10
의식의 통합	40.6/80	50.8	36.3/80	45.4	47.9/90	53.2	124.8/250	49.9
합계	69/330	20.9	47.9/330	14.5	84.5/340	24.9	201.4/100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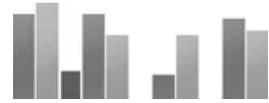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표 3-6〉 200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8.7/90	9.7	6.9/90	7.7	14.2/90	15.8	29.8/270	11
관계적 통합	21.4/160	13.4	5.4/160	3.4	22.8/160	14.3	49.6/480	10.3
의식의 통합	41.3/80	51.6	39.8/80	49.8	39.4/90	43.8	120.5/250	48.2
합계	71.4/330	21.6	52.1/330	15.8	76.4/340	22.5	199.9/1000	20

〈표 3-7〉 2008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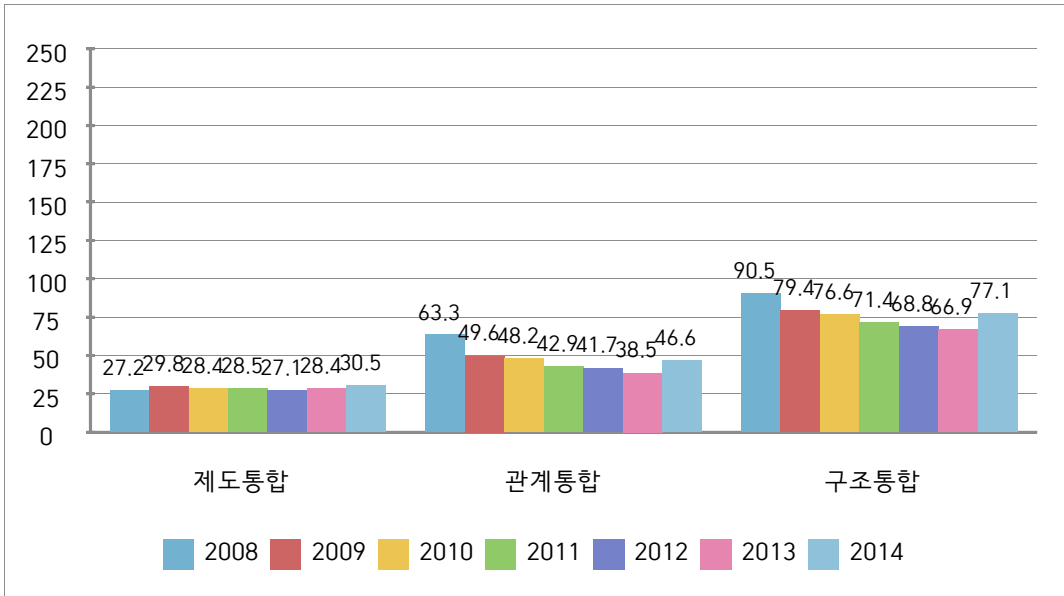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8.3/90	9.2	6.3/90	7	12.6/90	14	27.2/270	10.1
관계적 통합	22.7/160	14.2	10.1/160	6.3	30.5/160	18.6	63.3/480	13.2
의식의 통합	41.9/80	52.4	40.9/80	51.1	40.9/90	45.4	123.7/250	49.5
합계	72.9/330	22.1	57.3/330	17.4	84/340	24.7	214.2/1000	21.4

- 2008년~2014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합한 종합지수는 2013년의 상황(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일시 폐쇄, 장성택 처형 등)과 대조적으로 2014년에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남북당국 간 접촉의 증가, 사회문화 영역의 남북한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7년간 종합지수는 2008년 214.2→2009년 199.9→2010년 201.4→2011년 195.6→2012년 197.6→2013년 190.9→2014년 206.4로 나타났다.
-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구성되는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 90.6→2009년 79.4→2010년 76.6→2011년 71.4→2012년 68.8→2013년 66.9→2014년 77.1로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10.2점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9년의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관계적 통합수준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지난 6년 연속 감소세(2008년 63.3→2009년 49.6→2010년 48.2→2011년 42.9→2012년 41.7→2013년 38.5)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46.6점으로 전년 대비 8.1점 상승하였다. 하지만, 제도적 통합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통합수준에 머물러 있다.
- 7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08년 123.7→2009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3.7→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으로 격년 주기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 패턴은 한편으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20점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 2008년~2014년의 남북한의 통합률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4년 다시 상승하여 20% 수준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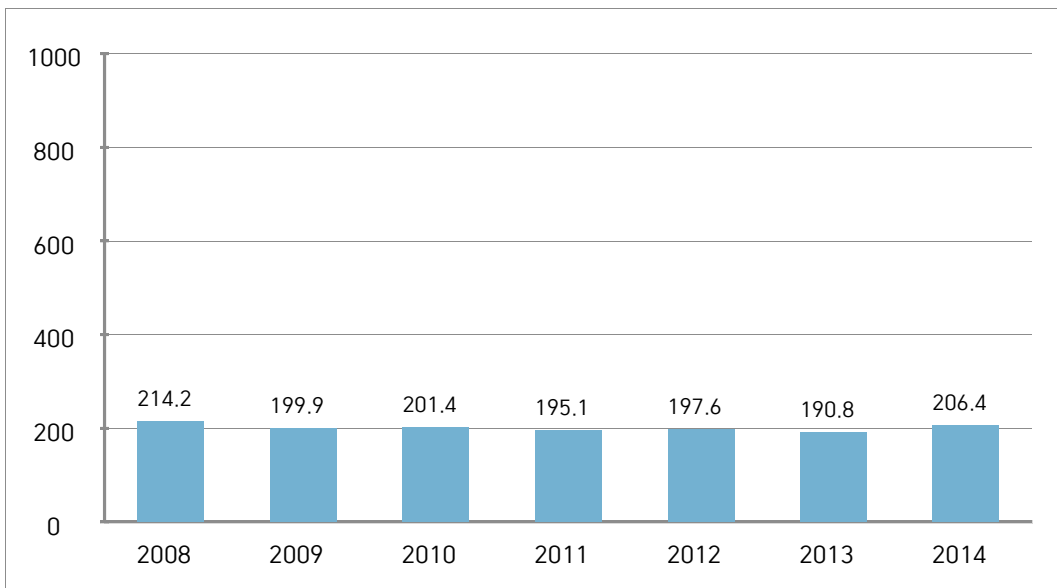


- 6년간 남북 통합률은 2008년 21.4%→2009년 20%→2010년 20.1%→2011년 19.5%→2012년 19.8%→2013년 19.1%→20.6를 나타냈다.
- 영역별 통합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 모두에서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22.1%→2009년 21.6%→2010년 20.9%→2011년 20.2%→2012년 20.4%→2013년 19.1%→2014년 21.1%로 2013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통합률이 떨어졌다가 1년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7.4%→2009년 15.8%→2010년 14.5%→2011년 14.7%→2012년 14.9%→2013년 14.1%→2014년 15.3%로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4%대의 통합률 수준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15%대로 상승했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08년 24.7%→2009년 22.5%→2010년 24.9%→2011년 23.5%→2012년 23.8%→2013년 23.9%→2014년 25.4%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역별 통합률은 사회문화>경제>정치 영역 순서로 통합률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구조적 통합(제도+관계 통합)의 경우 사회문화(31.5%)>경제(20.1%)>정치(11.4%) 순서로 통합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의식통합의 경우 경제(54.3%)>사회문화(54%)>정치(46.6%) 순서로 전년에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2014년에는 경제 영역의 통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2008~2014년 구조통합지수 비교



〈그림 3-2〉 2008~2014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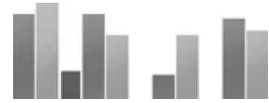


-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구조통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로 가장 낮고,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은 모두 2단계로 2009년 이후 6년 연속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단계→2009년 1단계→2010년 1단계→2011년 1단계→2012년 1단계→2013년 0단계→2014년 1단계로 2013년에 처음으로 0단계로 낮아졌다가 1년만인 2014년에 다시 1단계를 회복했다.
-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3단계→2009년 2단계→2010년 2단계→2011년 2단계→2012년 2단계→2013년 2단계→2014년 2단계로 2009년 이후 6년 연속 2단계에 머물고 있다.
-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역시 2008년 3단계→2009년 2단계→2010년 2단계→2011년 2단계→2012년 2단계→2013년 2단계→2014년 2단계로 2009년 이후 6년 연속 2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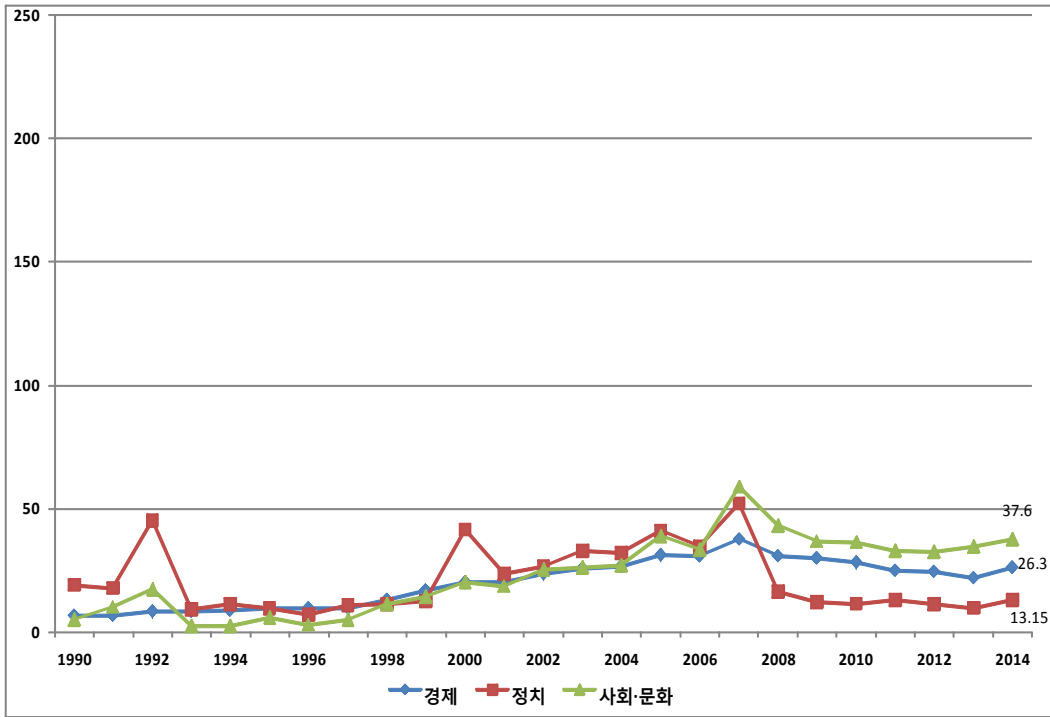
〈표 3-8〉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90)	관계(160)	구조(250)	단계	제도(90)	관계(160)	구조(250)	단계	제도(90)	관계(160)	구조(250)	단계
1989	1	6.62	7.6	0	1	8.1	9.1	0	1.1	4.8	5.9	0
1990	1	5.96	6.9	0	1	18.3	19.3	1	1.1	4	5.1	0
1991	1	5.9	6.9	0	1	17	18	1	1.1	9.3	10.4	0
1992	2	6.4	8.4	0	2	43.3	45.3	3	1.3	16	17.3	1
1993	2	6.5	8.5	0	2.5	6.9	9.4	0	1.5	1	2.5	0
1994	2	6.9	8.9	0	2.6	8.7	11.3	1	1.6	1	2.6	0
1995	2	7.8	9.8	0	3.1	6.6	9.7	0	1.9	4	5.9	0
1996	2	7.7	9.8	0	3.2	3.9	7.1	0	2.2	1	3.2	0
1997	2	7.8	9.8	0	3.3	7.8	11.1	1	3.2	1.8	5	0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1998	5	8	13.0	1	3.8	7.6	11.4	1	6.9	4.6	11.5	1
1999	5	12	17.0	1	4.3	8.5	12.8	1	7	7.4	14.4	1
2000	5	15.3	20.3	1	4.4	37.2	41.6	3	7.1	13.3	20.4	1
2001	5	15.5	20.4	1	4.5	19.1	23.6	2	7.2	11.6	18.8	1
2002	5.5	18.4	23.8	2	4.6	21.9	26.5	2	7.2	18.3	25.5	2
2003	5.5	20.2	25.7	2	4.7	28.3	33	2	7.4	18.7	26.1	2
2004	6	20.5	26.5	2	6	26.2	32.2	2	7.5	19.5	27	2
2005	6	25.3	31.3	3	6.1	34.9	41	3	8.4	30.4	38.8	2
2006	6.5	24.6	31.0	3	6.2	28.6	34.8	2	9.2	24.3	33.5	2
2007	8.3	29.5	37.8	3	6.3	46	52.3	3	11.7	47.3	59	3
2008	8.3	22.7	31.1	3	6.3	10.1	16.4	1	12.6	30.5	43.1	3
2009	8.7	21.4	30.1	2	6.9	5.4	12.3	1	14.2	22.8	37.0	2
2010	7.7	20.7	28.4	2	6.8	4.8	11.6	1	13.9	22.7	36.6	2
2011	7.7	17.4	25.1	2	6.8	6.4	13.2	1	14	19.1	33.1	2
2012	6.6	18.2	24.8	2	6.5	4.9	11.4	1	14	18.6	32.6	2
2013	7.2	15	22.2	2	6.4	3.6	10	0	14.8	19.9	34.7	2
2014	7.5	18.8	26.3	2	6.4	6.8	13.2	1	16.6	21.0	37.6	2



〈그림 3-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일평화연구원장)

공동연구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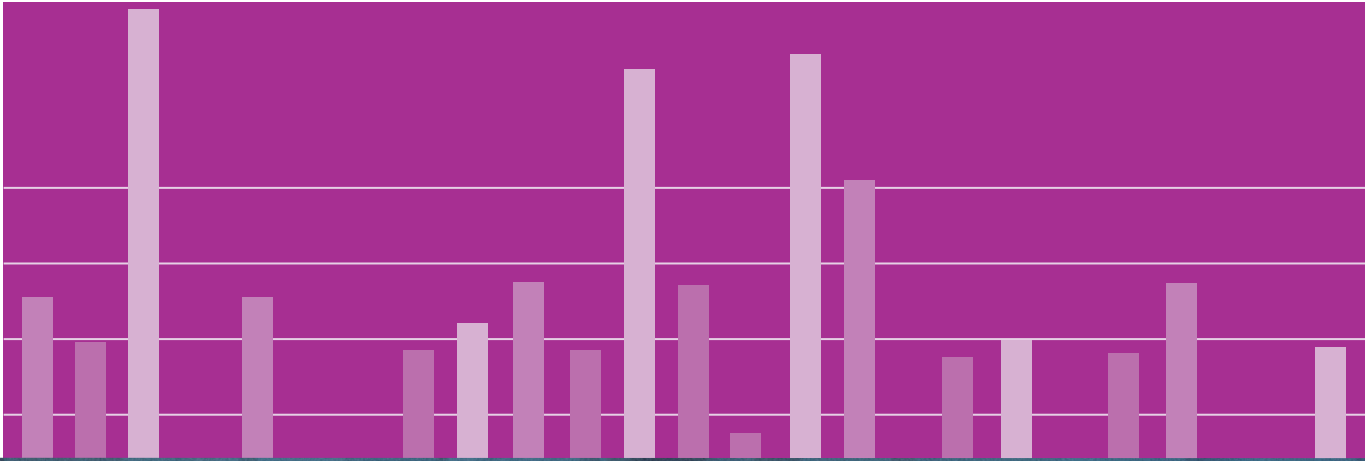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이종민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김경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

김희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